

☞ 세상은 요지경

“요즘 림[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더라.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아. 자연산을 더 찾는다고”

한나라당 대표 ‘보은병’ 안상수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면이 많다. … 반신욕을 즐기고 운동은 러닝머신만 한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강기정을 폭행한 한나라당 의원 김성희

“강기정의 무모한 도발과 김성희의 한 방 응징 … 얻어 터진 민주당 강기정 선수”

웹사이트에 폭행 사진을 올려놓고 친절히 설명하는 김성희

“민노당이 조선노동당의 괴뢰 정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매 정당”

막장으로 치닫는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포항시민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형남예산’ 특례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 이병석

“한국전쟁 때 유실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잘 보관해 줘 고맙다”

악탈당한 문화재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 이범관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감동이고 같이 산다”

‘인권’위원장 현병철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이 철딱서니가 없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다. 저도 보면 답답하다”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지난 대선에서 사탄이 온갖 거짓말과 비방, 훼방, 참설을 일삼았지만 이명박 장로를 압도적으로 세워 주시고 국정을 잘 살피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조찬기도회에서 김홍도 목사

아프가니스탄

또다시 점령과 학살의 1년이 지나갔다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오바마 대통령의 1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정책에 대한 검토는 본질적으로 놀라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평가 전락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김스가 한 말이다.

그러나 발표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평가 전락보고서는 “본질적으로 놀라움” 그 자체다. 이 보고서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지난해 3만 명을 증파했지만 탈레반의 저항을 꺾지 못했다. 오히려 남부와 동부를 근거지로 삼던 탈레반은 북부 지역까지 진출했다.

미군과 나토군도 사상 최대 규모인 7백 명이 전사했다. 이 수치는 개전 이후 총 전사자의 3분의 1에 맞먹는 규모다. 전사자를 줄이려고 영국은 탱크 투입까지 고려중이다.

오바마는 “지난해 미군 증파 이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으로 약속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이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나토군이 4년 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기로 한 결정이 더 솔직해 보인다.

오바마는 지난해 증파 결정을 앞두고 ‘코인’(저항세력 진압) 전략으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민심을 얻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향후 작전도 탈레반 영향력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벗어나게 해 진정한 재건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실패

그러나 ‘코인’ 전략은 실패했다. 실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대규모 공습과 ‘화력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전쟁 평가 전락보고서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미군과 나토군은 공습과 특수부대의 야간 습격에 의존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

동부지역을 관할하는 연합군 사령관 존 캠벨은 이번 겨울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공격을 15~20퍼센트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가 가진 카드가 전임 정부들처럼 아만스러운 방법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게다가 전쟁 수뇌부 내에서는 파키스탄 국경 근처의 탈레반 보급로를 차단하려면 파키스탄을 공격해야 한다는 위협천만한 목소리가 높다. 이미 오바마 정부 들어 파키스탄으로 공격을 확대하면서 2백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생겼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더 큰 재앙을 날기 전에 하루 빨리 모든 외국군은 철군해야 한다.

UAE 파병 동의안 날치기 처리

날치기로 통과된 파병안과 파병 연장안은 무효다

한나라당이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는 ‘묻지마’ 파병이 무엇인지 보여 줬다. 얼마나 급했는지 파병 예산이 누락됐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해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미 중동에 진출한 기업과 한국인 관광객 등이 테러 표적이 됐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기업에 고용된 한국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테러 공격을 받아 방글라데시 노동자



11월 G20 반대 집회에서 나온 파병 반대 목소리. 더 큰 재앙을 날기 전에 모든 외국군은 철군해야 한다.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희수 교수의 지적처럼 패권 전쟁에 파병을 하고 중동 친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한국은 중동에서 미국의 ‘1급 에이전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지난해 소말리아로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통과됐다. 소말리아 아덴 만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지역이다.

미국이 소말리아판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소말리아 경제는 파국됐고, 대다수 소말리아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아덴 만에는 ‘생계형’ 해

적이 출몰하기 시작했고, 몇 년 전부터는 그 수가 급증했다.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아덴 만에 파병을 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21세기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는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가들이다. 미국과 미국에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뒤엉켜 소말리아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아프리카 민중의 희생을 대가로 이익을 챙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중단해야 하고 청해부대는 소말리아에서 철군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 직원 구조조정, 돈벌이 경쟁, 민주주의 파괴 …

서울대 법인화 법 폐기하라

역대 정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 온 국공립대 법인화가 결국 첫 삽을 떴다. 12월 8일 예산안과 함께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날치기 통과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인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학을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맡겨서 이윤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대 자산 소유 권리와 재정·인사 등 각종 운영 권리가 국가에서 법인 이사회로 넘어간다. 서울대가 채권을 발행하고 자유롭게 수익 사업을 하는 방안도 열렸다.

법인화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법인화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시행하기 시작한 총장 직선제는 폐지된다. 대신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고 서울대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이사회 15명 중에 학내 구성원은 4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과부 차관들 어오고 기재부 차관 들어오고 … 나머지는 보나마나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 말이다. 대학 운영이 정부와 기업의 입김에 더한층 종속되는 것이다.

정부가 강화하려는 “대학 경쟁력”도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경쟁력이다.

벌써부터 일부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교수장, 원장을 상품화를 할까” 고민하고



12월 17일 서울대 법인화 반대 집회. 눈이 오는 날씨에서 2백여 명이 모여 “대학을 기업화하는 법인화 반대”를 주장했다.

있다고 대학노조 김연옥 서울대지부장이 말했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서울대도 중앙대처럼 돈벌이가 되는 학문만 육성하고 비인기 학과는 구조조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등록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대는 이미 등록금이 연간 6백8만 원으로 국공립대 중 최고다. 그런데도 “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서울대 본부는 노력적으로 ‘대학 재정 어려우면 지금의 등록금 유지 못한다. … 전문대학원이 반발이 없으니 까 거기부터 올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지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비용을 줄인다는 논리로 직원 구조조정

도 벌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공립대를 법인화하면서 대학 직원 10만 명 정도가 해고됐다.

법인화가 지방대학으로 확대되면 학벌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대학은 살아남는다고 해도 지방대학들은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 양극화, 서열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다.

날치기

서울대를 선두로 인천대, 충남대, 부산대 등 다른 국공립 대학들도 법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교수·학생·직원으로 구성된 서울대 공대위는

“법인화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7일 학내 집회를 하고, 20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방학 때 농성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내년 3월에는 3천 인 선언을 해서 최대한 반대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지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도 기자회견을 하고 1월 29일 법인화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는 긴 안목을 갖고 끈질기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1946년에 미군정이 미국의 주립대학을 본따서 서울대에 법인 이사회를 두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막지 못했지만 계속 투쟁한 결과 3년 후에 성공을 거둬 1949년에 결국 서울대는 국립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법인화를 폐기시킬 때 57개 학교에서 4만 명이 동맹휴업을 하며 강력히 투쟁했다.

2009년 9월 실시한 총투표에서 서울대 학생 80퍼센트 이상이 법인화를 반대했다. 법인화를 막으려면 이런 여론을 모아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교직원들의 파업 같은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선영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 《레프트21》 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연세대 청소 노동자 투쟁 승리’,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다’, ‘진보신당 내 위험한 주장들’, ‘대북 압박 강화 중단하라!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한 정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잠정 평가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다’ 등이었습니다.

www.left21.com

위험천만한 한미일 동맹 강화 시도

최근 며칠은 동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큰 경쟁과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한 번의) 계기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 주말 러시아의 요구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는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완전 난장판이 됐다. 열강들은 8시간 동안 설전을 벌이고도 합의문 한 장을 내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또, 중국어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 〈봉황 텔레비전〉은 중국과 러시아가 내년에 최초로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한반도 근처에서 벌일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 한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다른 한편에 미국과 동맹들이 있는 것이 마치 냉전 대립구도를 연상시킬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는 듯이 보인다. (물론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오늘날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진정한 원인은 냉전 구도의 잔존이 아니라 냉전 종식 후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북핵 위기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핵 개발 위기를 과장해 온 것은 지역 동맹들을 결집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경제와 영향력이 커지자 이 결집이 북한의 후원자 노릇을 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구실을 하기를 바랐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역대 미국 정부의 기본 방향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올해 동아시아에서 일련의 사건들 – 천안함 사건,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 등 – 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국과 한미일 동맹 간 날카로운 입장 대립을 유도해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으로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

따라서 최근 남북 간 포격 사태를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6자회담이나 사격 훈련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것을 오바마 정부가 꺼릴 이유가 없었다.

또, 최근 일본 민주당 정부가 발표한 신방위대강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발맞추어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포격 사건을 이용해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신방위대강이 함축하는 일본 방위 전략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미국 초대형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한 12월 5일 미일 합동 군사 훈련

로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강요할 기회를 얻었다. ‘북한 위협’을 옹호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당면한 위협’으로, 중국을 ‘우려 국가’로 분류했지만, 실제로 이번 신방위대강이 담은 가장 큰 변화는 ‘당면한 위협’인 북한에 대처하는 법이 아니라 아직은 ‘우려’의 대상인 중국에 대처하는 법이다.

〈아시아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냉전 시대 장비와 조직 – 특히 러시아를 향해 있는 일본 최북단인 홋카이도에 배치된 육상자위대 – 를 줄이는 대신, 일본 남단 오키나와의 난세이군도[센카쿠/다오위다오를 포함]와 중국, 타이완과 가까운 동중국해 지역에 더 많은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의 목표는 명백히 중국 해군 증강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해군증강

신방위대강에 중국 정부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아사히 신문〉은 그 이유에 관해 중요한 지적을 했다.

“중국 정부의 비판 중 하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신방위대강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4개년국방정책검토(QDR)는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전략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난세이군도 방어선을 강화하자는 방위대강의 제안은 QDR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 지역 경제와 중국 경제 사이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한미일 3국 동맹을 반중 동맹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언제나 논쟁적인 일이다.

대단히 친미적인 〈조선일보〉조차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의 주된 목표로 대북(對北) 공조 필요성을 내걸고 있지만 여기에는 대(對)중국 견제라는 더 큰 배경이 있다 … 중국은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강화를 중국을 포위하려는 적대적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선 몇 배 신중하고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며칠 뒤 〈조선일보〉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기본축 위에 서서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한쪽 날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중국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어떤 신호가 그토록 신중한지 알 수가 없다.

한국 지배자들에게 이런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없다. 미국과 관계는 한국 자본주의에게 통상 규모로만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G2라는 호들갑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고, 미국 통화는 기축통화며, 미국은 전 세계 군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 지배자들에게 이상적인 상황은 미국과 동맹을 긴밀히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고도 성장에서 이익을 누리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시작된 대불황으로 국가들 간 관계에서 경쟁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면서 이 모순적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동아시아에서 이 많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뒤숭숭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아직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

스탄에서 뒷처리하기 바쁘다. 경제적 상호관계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 그 동맹과 중국 사이의 경쟁적 관계가 최악으로 향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중 동맹으로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재앙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두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김용욱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에 대한 <레프트21>의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는 명백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강화 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런 사태를 조성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고 등을 거치며 더욱 강화돼 온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이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레프트21> 45호의 관련기사들에서는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련기사들은 반제국주의의 문제와 북한 체제·정권에 대한 비판 문제를 분명한 강조점 없이 편집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고, 다행히 46호부터는 혼란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과 비판에 감사드리며 <레프트21>이 반제국주의의 투쟁에서 흔들림 없는 관점을 취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폴라주 42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일부전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8호(2010년 겨울)

가격 : 16,000원

구독 문의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특집 지금의 이슈들

3대 세습 북한은 어디로?
– 북한 권력 세습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망 _ 김하영
금융세계화론 비판 _ 강동훈
진보 교육감 탄생과 교육운동의 쟁점 _ 정진희
건축의 정치학 _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쟁 어떤 전략과 전술인가?

전략과 전술의 기초 _ 최원봉
진보대통합 논의에 부쳐 _ 김인식
새 상설연대체 – 한국진보연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인가? _ 최영준
해방정국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 _ 한규한
코민테른에 제출한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테제 _ 트로츠키

현대 진보사상 조류

니코스 폴란차스의 정치 이론 비판 _ 롤린 바커

서평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결정적 한 가지 _ 정중남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 _ 장호중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무의미한 예측 _ 찰리 호어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시장을 떠나서 학교를 살리자! _ 김성보
《제 게바라, 혁명적 인간》
신화에서 걸어 나온 인간 게바라 _ 한수영
《이미지 – 시각과 미디어》
프레임의 안과 밖을 모두 보는 법 _ 최윤진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NLL 국경선 취급은 근거 없는 억지일 뿐

이명박은 12월 20일 연평도 포격 훈련을 강행하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영토방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북한 정부는 “남조선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은 쌍방 아무런 합의 없이 생겨난 것으로 ‘정전협정’은 물론 … 괴뢰들 자신의 ‘해양법’에도 어긋나는 유령계선”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제1차 교전을 포함해 세 차례 벌어진 서해상 교전은 모두 NLL(북방한계선) 남쪽 인근 해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NLL은 남한 호전파들의 주장과 달리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 해군의 복상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가 그른 선’이다.

1953년 휴전 협상 당시 이승만은 휴전에 반대해 북진 무력 통일 주장을 고수했고, 해군을 동원해 황해도 연안을 계속 군사 공격했다. 이런 이승만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는 유엔사령관을 통해 NLL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호전성을 우려해 반(反) 이승만 쿠데타까지 모의할 정도였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 선을 해양 국경선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 연평도 남북 포격 사태 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쉐리그 해리슨이 ‘NLL을 북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남쪽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 베트남전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쟁광 헨리 키신저마저 외교 문서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던 것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남한의 우익들이 NLL의 효시라고 내세우는 클라크 라인인 한국전쟁 당시 ‘해상 봉쇄선’으로 영해선과는 다르다. 더구나 유엔의 국제 공인을 받지 못해 미군 스스로 1953년 8월에 철폐한 선이다.

1953년 정전협정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합의한 군사분계선만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해 합의한 경계선이 그동안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NLL을 국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1956년부터는 해마다 NLL을 넘으며 불인정 의사를 드러내 왔다. 더구나 서해 5도는 남한 영토보다 황해도 연안에 더 인접해 있어 백령도(천안함)나 연평도에서 벌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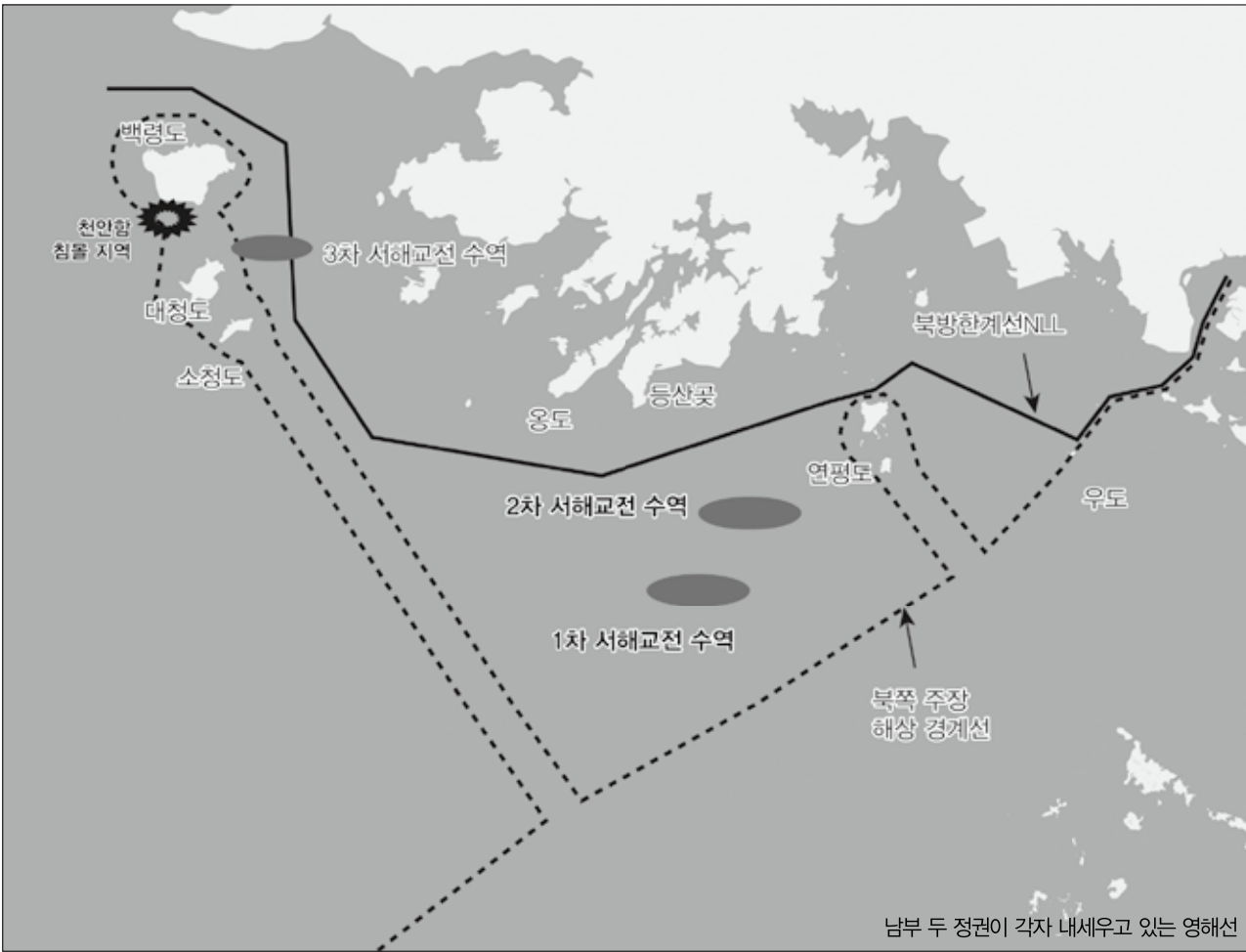
그래서 북한은 1977년에 서해 5도 이남에 자체 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선도 NLL처럼 근거 없긴 마찬가지다.

1953년 정전협정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합의한 군사분계선만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해 합의한 경계선이 그동안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말은 우익인 노태우 정부도 NLL이 국경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주권 행위” 운운하며 위협적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이 이를 응원한 것은 전혀 명분이 없는 짓이다.

바다 위에 멋대로 선을 그어놓고 자칫 국지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군사적 위협 행위를 반복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김문성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반제국주의가 아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쇠퇴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으로 만회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벌인 아반적인 침략 전쟁은 이런 전략의 결과였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과장해 ‘평화’의 유일 관리자를 자임해 왔는데 그 실상은 군사적 대북 압박이었다.

매번 약속을 어기고 사태를 악화시킨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북미공동선언을 무시했으며, 9·19 공동선언은 바로 뒤집었다.

이런 군사·경제적 압박이 북한 정권을 핵과 미사일 개발, 비랑골 외교로 내몬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반제국주의의 저항으로 볼 수는 없다.

첫째, 핵은 인류와 환경을 오염하고 파괴하며 폭격 지역의 인간을 절멸시키는 무기일 뿐이다.

따라서 방어적 억지 수단일 뿐이라는 변호도 명분이 없다. 약소국의 핵무장은 제국주의 핵 강국들을 흉내내는 것일 뿐

이다.

둘째, 군비 증강으로 강대국에 맞서려면 다른 분야를 희생해 가용 자원을 군사 분야로 최대한 집중시켜야 한다. 이 과정이 3대 세습 같은 권력의 초집중, 비민주적 억압의 강화, 노동계급 삶의 희생을 낳았다.

올해 김정일은 “[인민에게] 흰 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고 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만성 식량부족 국가가 돼 버렸다.

그 뒤 국제협상에서 북한의 요구 중 빠지지 않는 게 식량 지원이었는데, 정작 북한 정권의 우선 순위는 군비 증강에 가 있다.

결국 민중의 희생으로 군비를 늘리는 것은 북한 체제의 억압적·착취적 성격을 드러낼 뿐이다.

체제의 우선순위

셋째,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은 진정으로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중적 지지를 동원할 수 없다. 사실 북한

정권은 이에 관심도 없다.

대규모 살상무기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연평도처럼 군사 보복식으로 대응하면, 표적이 되는 상대 국가(남한)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민중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남한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매년 부딪히는 어려움이다.

역설이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도는 미국 제국주의의 동북아 개입을 정당화하고 일본이 재무장하는 명분을 쌓는 데 이용됐다.

반대로 체제와 정권이 진정한 개혁을 제공하면서 ‘세계적 반동의 보루’인 미국 제국주의와 맞서는 경우, 나라 안팎에서 진정한 반제국주의 대중 동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제국주의 연합군을 물리친 배경이다.

비슷한 예로, 미국은 반(反)차베스 우익 쿠데타를 세 번이나 후원했는데, 이들은 번번이 민중 저항에 직면해 실패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에 지지를 호소하다가도 한편에서 관료와 군부에 의존하고, 중국 같은 비서방 강대국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최

근에는 핵개발을 선언했다.

이런 사례는 반제국주의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제국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기업 경쟁이 국제적 규모로 확산한 결과다. 호전적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를 바꾸는 일은 자본주의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목표는 제국주의 미국에게서 “체제 보장”을 받고 그 질서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낯짜 이유다.

김일성은 1994년 전쟁 위기 때 방북한 카터에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고 말했고, 김정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같은 언급을 김대중에게 전했다.

“철천지 원수”의 군대를 통일 후에도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주둔도 인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신화를 거부하고 아래로부터 진정한 반제국주의 저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문성

정부와 쌍용차 사측이 노동자를 연쇄 살인하고 있다

애똥하게도 또 쌍용차 노동자 한 명이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 중증 장애로 다리 한쪽에 의족을 달고도 점거파업에 참가했던 황대원 동지가 12월 14일 스스로 목을 뒀다.

그는 지난해 희망퇴직한 후에도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고통 속에 살다 끝내 목숨을 거뒀다. 기자가 황대원 동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먹고살 길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며 근심에 싸여 있었다.

이것은 단지 황대원 동지만의 일은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도 생활고와 가정 파탄, 구속, 연행, 손배가압류, 벌금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와 가족이



“살인범을 잡을 때까지 싸우는 게 죽은 동지들을 기리는 길”이다.

여섯 명 사망한 데 이어, 파업 이후에도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이유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외침도 계속되고 있다.

황대원 동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70일 넘게 점거파업에 동참했다. 비장애

인도 견디기 힘들만큼 끔찍했던 ‘전쟁터’에서 동료들과 함께하길 택한 그는 “장애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그는 의족이 빠져 다리에 고름이 가득 차고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 끝까지 남고 싶다”며 투지를 불태웠다.

“박 기자님, 우리 편이 돼 줘서, 힘을 낼 수 있게 해 줘서 언제나 고마워요” 하고 말하던 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가 죽음을 택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하면 비통함을 참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쌍용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하는 황대원 동지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쌍용차지부 양형근 대외협력실장은 “사망하는 동지들은 계속 생기는데, 아직 살인자를 못 잡았다”고 애통해 했다. 그는 “지금 쌍용차를 경영하는 놈, 청와대에 앉아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놈이 살인범”이라며 “살인범을 잡을 때까지 싸우는 게 대원리와 죽어 간 동지들을 기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회계조작까지 일삼으며 정리해고를 강행한 쌍용차 사측과 경찰 폭력으로 생존권을 유린한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였다. 이 끔찍한 연쇄 살인을 멈추려면 당장 쌍용차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구속자를 석방해야 한다.

박설

복지 삭감 정부에 맞서는 진보의 과제

» 1면에서 이어짐

부자 감세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이로 말미암아 재정 적자가 커지면 금리가 오르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기업주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복지 재정을 삭감하려 한다.

연기금으로 쌓아 둔 수백조 원도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가 비준되면 그나마 존재하는 복지 제도들조차 크게 후퇴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 삭감, 보험료 인상,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연기금의 주식시장 동원, 한미FTA 등은 지금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민주당·국민참여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것들이다.

최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터 대표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 일부 세력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그는 복지국가 ‘혁명’을 위해서는 진보진영이 ‘소수와 전락’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민주당 집권 시절의 복지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 나가기 십상이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거둬 복지를 늘리자는 그의 제안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내년과 2012년 선거 때문에 ‘복지’를 말하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복지를 확대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예산안 날치기 통과 직전에도 민주당은 대기업에 감세 특혜를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 연장안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몇 달 전 당내 경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에는 반대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한 부유세에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에는 반대하지만 한미FTA 자체는 폐기할 수 없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좀더 오만하고 난폭한 스타일이라면 민주당은 소심하고 동요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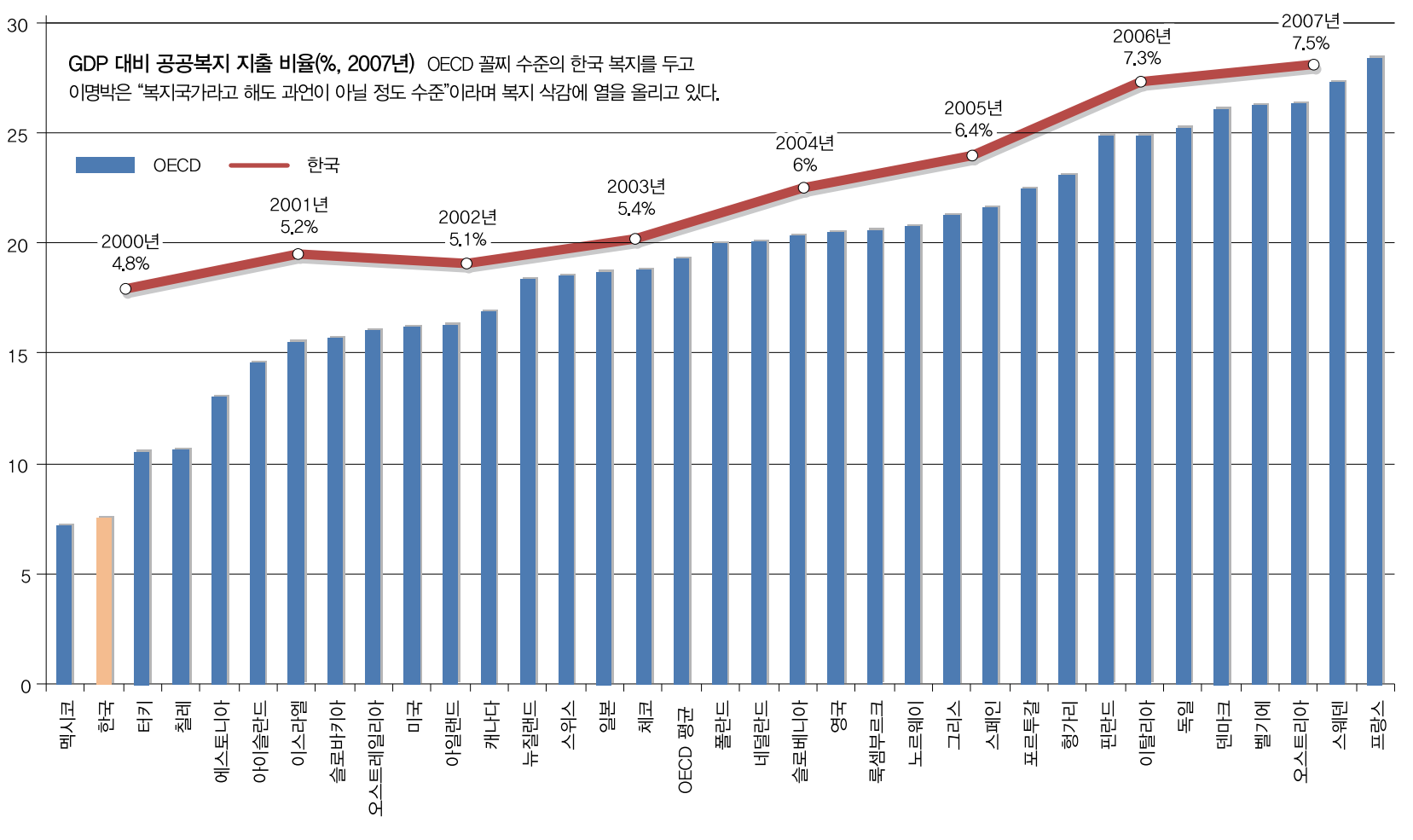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차이는 진정으로 복지 확대를 원하는 노동 대중의 바람과 두 주류 정당 모두와의 거리에 대면 극히 미세한 차이일 뿐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날치기 후 장외투쟁을 선언했지만 대중집회와는 거리를 두며 손학규 1인 천막농성으로 싸우는 시늉만 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노동계급 일부에게 양보를 요구하거나 민주당과 상시적으로 연합하는 노선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노동 대중의 바람에 걸맞는 과감하고 급진적인 복지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시킬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을 차근차근 조직해야 한다.

장호중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서구 국가들이 과거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들어진 틀”이라며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복지국가 같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생각이 없고 돈을 나눠 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언제 그래본 적이 있길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교육이 그렇듯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도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박근혜의 ‘복지론’에는 대개 복지 삭감의 명분이 되는 세대간 갈등론과 시장 논리로 복지에 접근하는 사회투자론이 스며들어 있다.

“고령화와 함께 복지가 확대되는 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두환의 임발린 말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

기인 지금 복지 정책을 잘 짜서 복지가 후대에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선제적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후대에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 부모와 자식 부양의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이다. 사회투자론은 수익이 남을 때만 복지에 ‘투자’하겠다는 잔인한 정책이다.

구체적 내용도 없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내용은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는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한 뒤 취임 연설문에서 말한 ‘민주 복지국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전두환의 의도와는 달리 1987년에 벌어진 노동자 대투쟁은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구실을 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 등 한국의 복지제도들이 본

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1987년만큼 강력한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진보진영은 선거를 통해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자기제한적 전망을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광범한 단결과 투쟁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장호중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안해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 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라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 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연석회의의 구성을 일부 단체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말고는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범국민에 어지간한 단체들이 다 포함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완전히 폐쇄적인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회의를 제외하면 다른 참가 단체들도 모두 범국민 소속 단체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12월 20일 열린 범국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비민주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개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가할 경우 시민회의

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결국 범국민에 소속된 단체들 다수는 (이들은 대부분 시민회의의 선제적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 사실상 배제되고 시민회의는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선제적 보험료 인상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후퇴한 안을 주장하다가 범국민 내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범국민에서 이탈한 인물들이 만든 단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연석회의의 구상이 시민회의와

그들의 후퇴안을 되살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도 문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선제적 보험료 인상 방식 원 포인트 제시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회의 쪽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연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토론 결과에 따라 삭제할 수도 있다며 타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연석회의에서도 시민회의의 선제적 보험료 인상 방식 수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민회의의 견해가 과잉대표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이런 논쟁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것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대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연석회의를 운영해야 하며 노동자 양보론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장호중

2라운드 투쟁을 시작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사들

25일간의 점거파업을 마무리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라운드' 투쟁을 시작했다.

12월 12일에는 비정규직지회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 6백여 명이 모였고, 사측 폭력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합원도 휠체어를 타고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지회장은 계속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현대 자본에게 비수를 꽂았다. 당당히 어깨 펴고 현장에 돌아가 조직을 복원하고 다시금 가열차게 투쟁을 벌여가자.”

점거파업 후에도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조합원들은 25일간 점거파업 기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기운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과 조직을 추스르고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수·금 출근투쟁을 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결의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는 조합원 4백여 명이 공장 안에 모여 사측의 탄압 중단과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4공장 조미선 조합원은 현장의 조직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회사에 가도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하면 비조합원들을 가입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죠.”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기운’을 억누르려고 여념이 없다. 1백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고 2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



12월 22일 공장 안에서 열린 비정규직 결의대회 이 “작은” 거인들이 현대차 울산공장에 ‘단결’과 ‘연대’의 과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다. 조합원 16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던 정규직 대의원 6명도 고소·고발됐다.

또한 사측은 고용보장 약속을 어기고 ‘선별적 복귀’를 받아들이라며 이번 파업의 발단이 됐던 동성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도 외면하고 있다.

‘선별적 복귀’는 조합원들을 갈라치기해 사실상 고용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동성기업 김응호 대의원은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생계 위협을 노려서 분열시키는 것이죠. 몇 자리 있으니 들어올래, 말래 협박한 후 복귀한 노동자에게 한 달

또는 보름간 일 시키고는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12월 14일 동성기업 소속 조합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섭에는 상대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다.

현대차지부 지도부의 이러한 행보는 계속됐다. 사측의 탄압이 계속되는데도 연대 파업 찬반투표를 개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파업 시도에 김을 뻗었다.

이것은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오로지 비정규직 파업을 가로막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추진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 투표자의 70퍼센트 정도가 파업 반대표를 던진 것도 이경훈 집행부가 사실상 유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아직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이간질과 이경훈 집행부의 배신적 작태를 뛰어넘을 정도의 자신감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편, 여전히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16일, 이번 점거파업에서 연대의 모범을 보인 1공장 정규직 대의원들이 원·하청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투쟁 일정에 정규직 조합원들이 함께 참가하고, 사측이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공장에 상주시키는 것에 항의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부는 대의원회 명의로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부착했고, 4공장 의장부는 비정규직 탄압 중단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발행했다. 이런 원·하청 공동행동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사측은 교섭을 지연시키며 더한층 탄압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사측의 탄압을 저지하고 교섭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산 사내하청지회가 제안한 것처럼 3지회가 다시금 파업을 포함해 공동 행동 건설에 나서며 다시 다가올 투쟁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며, 특히 정규직 조합원들의 연대를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더 많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가로막는 온갖 정치적·이데올로기 논리를 뛰어넘도록 개입하고 선전·선동·조직을 해야 한다.

2공장의 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생계 적정도 되지만 가시적인 연대세력이 있다면 더 힘들더라도 다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김기선

현대차 비정규직·정규직 투사들은 말한다



4공장 조미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뿌듯해요”

“공장 점거도 해보고 바깥에서 투쟁도 해보고 하면서 이번 투쟁으로 많이 느꼈죠. 우리는 정당하네, 회사에서 탄압하고, 개 취급 당하니까 억울했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25일간 투쟁이 끝나고 돌아봤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느끼죠. 처음에는 정규직 될 생각으로 싸웠는데

지금은 자본가가 바뀌지 않는 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회사일 하는 것보다 투쟁하는 게 더 즐거워요.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집에 가도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파업 다

시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누가 ‘이 싸움에서 너의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묻은 적이 있어요. 저는 ‘왜 내가 혼자냐. 전국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답했죠. 물론 이제는 혼자서 팻말도 들 수 있고, 찾아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뿌듯해요. 한 동지가 전태일 열사 책을 읽어 보라고 권했는데 이 책을 읽고 시작한 거예요. 이 분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이렇게 까지 했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황인하 동지도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감사하죠.

“그리고 다시 각오를 다져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여야 한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이지요.”



시트1부 동성기업 김응호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정규직 조합원 1만여 명이 우리 투쟁을 지지합니다”

“이경훈 지부장이 말로는 연대한다고 했지만 말한 만큼 지키지 않았어요. 중재자 구실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조합원들의 의지를 물어오겠다며 총투표를 가지고 협박했어요. 중재자 구실을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꺾은 거죠.

“정규직 조합원들 1만 명[파업 찬성표

를 던진 사람 수] 정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편에 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정규직이 돈만 생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규직들과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싸울 때 우리 투쟁을 지지한 정규직 조합원 1만 명

이 2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조합원들도 뭔가 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거든요. 제가 아산을 다녀왔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아산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고 있

잖아요.

“2차 투쟁에서 필요한 것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 가입시켜야죠. 우리가 다시 현장에 들어가는 것 보면서 가입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최병승 동지 판결[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면 ‘이제는 되는 것 같다’고 느낄 겁니다. 용기나 투쟁력이 배가 될 거예요. 만약 판결이 안 좋게 나오면 억울해서라도 투쟁에 나설 거예요.”



4공장 정규직지부 정동석 조합원

“어떻게 걸림돌을 뛰어 넘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25일간 1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차 정몽구의 숨통을 조이는 엄청난 힘을 가진 투쟁이었습니다. 19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라인을 세운 강력한 투쟁이었고 현대차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기간 벌인 점거

투쟁이었죠. 그래서 사측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으로 확산될까 무엇보다 우려했을 겁니다.

“그 투쟁에 의해서 내 자신이 많이 고무받았어요. 노동자들의 힘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이번 투쟁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투쟁했어요. 그러나 투쟁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지부장은 파업을 파괴하는 구실을 했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소위 민주파 현장

조직과 활동가들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측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힘을 빼고 탄압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1공장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결의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 투쟁 같은 연대가 다른 공장으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조직을 추스르고 원하청 연대를 다져서 2라운드 투쟁을 해야 해요.”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월 3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좌파적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던 지구물리과학 학술대회

나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지구물리과학 연합 (이하 AGU)의 정기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에서 온 대기과학, 지질학, 해양학, 천문학 과학자들과 과학 교사들이 참가하는 AGU는, 등록인원이 1만 8천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물리학회다.

세부 전공을 뛰어넘어 지구를 연구하는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이 참가하기 때문인지, 언제나 AGU에서는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올해의 AGU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해마다 이러한 논의는 많았지만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와 많은 과학자들의 기대를 받았던 오바마 정부의 무능을 보면서 더욱 절박해진 느낌이었다. 게다가 올해는 미국 TV 뉴스에서 '기후 변화는 사실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선동일 뿐'이라는 우파들의 주

장이 여과 없이 방송 됐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듯했다.

과학사를 연구하는 나오미 오레스키 박사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소수 과학자 집단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과거 담배의 유해함을 부정했던 과학자들과 인적·물적으로 직접 이어져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기후변화

더 나아가서, 그 과학자들이 그러는 것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담배든 기후변화든 정부 규제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자유시장 신봉자인 이들은 “규제는 곧 사회주의”라는 신념 하에 과학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폭로는 가장 명쾌하고 또 날카로웠다.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350.org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제임스 한센 박사는 여러 연구를 토대로 지구온난화를 2℃ 이내로 막자는 코펜하겐 회담의 내용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또 현재 정부들은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석탄 사용을 빨리 중단해야 하고, 소비자가 아니라 화석연료 생산자와 수입업자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날에 나는 홍보물을 하나 받았다. 그 홍보물을 낸 BAMN이라는 단체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지만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있어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대중행동을 강조했다. ‘과학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세간의 편견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은 현재 가장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 있으므로 과학자들은 그들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식있는 과학자들은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위기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안에서 좌파적 견해도 공존하고 있다.

김중환

고려대 자치공간 철거 반대 투쟁이 승리하다

고려대학교 당국은 경영대의 네 번째 건물인 현대자동차관을 건설하면서 옆에 있던 사범대 분관을 철거하려고 했다. 사범대 분관은 사범대 자치공간, 조형학부 수업공간, 학과 사무실 등이 있는 건물이다.

고려대 당국은 원래 2004년에 경영대 호텔을 지으려고 이 건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고려대 당국은 사범대 학생회가 2년째 공석인 틈을 타서 그동안 성가셨던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던 것 같다.

사범대 학생들은 학생회가 없음에도 분관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사범대 분관 철거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어 대응했다. 2004년 사범대 학생회 집행부였던 나는 후배들의 초대를 받아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다. 나는 2004년에 어떻게 싸웠는지 글을 써서 제출하고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함께 토론했다.

대책위에 모인 학생 대표들은 이것이 경영대와 사범대 학생들 사이 갈등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번이 세 건물을 지으며 경영대의 자치공간은 모두 사라진 데서 볼 수 있듯이 자치공간 문제가 단지 사범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문제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면서 투쟁을 시작했다.

대책위 학생들은 학교 당국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깨달았다. 항의행동을 통해서야 공간위원회 회의 시간과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대책위는 항의행동을 통해 공간위원회 회의를 무산시키고 대신 학생 대표들과 학장·학생처장·관리처장의 면담을 따 냈다. 대화조차 투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달았다.

결정 일주일 만에 2백 명 규모 집회를 개최한 대책위는 집회 일주일 만에 사범대 학장으로부터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투쟁 경험도 없는 학생들이 건물 철거를 막아내는 투쟁을 성공으로 이끈 데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2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을 때 학생들은 본관 안으로 행진을 해 들어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출교 철회 투쟁 이후 고려대에서 학생 쟁점으로 본관 안에 진입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좌파 총학생회의 당선, ‘고대녀’의 문과대 학생회장 당선 등을 보면서 고려대에서도 급진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학생 조직좌파들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이런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

안형우

한국외국어대 캠퍼스간 전과 허용 논란

학벌주의적 차별에 반대해야

요즘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에서는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학칙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서 학교는 서울과 용인 캠퍼스 간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전과를 편입학 정원 15퍼센트 이내에서 허용하려 한다. 이전에는 동일캠퍼스 내에서만 전과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양 캠퍼스 간 전과도 가능해진다.

새로 당선한 ‘나비효과’ 총학생회와 대부분의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 학칙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캠퍼스 간 전과제도를

를 이용해 입시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려 할 것이다. 학교는 제대로 된 학생들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입시홍보 자료에 이 내용을 실어 버렸는데, 학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사제도를 바꾼 것은 문제다.

또한 전과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수 총원과 강의실 확충 등을 하지 않은 채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서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캠퍼스 간 전과가 활발해지면 용인 캠퍼스 학생들에게 이익이다. 총학생회는 용인 학생들의 수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지지해야 한다. 특히, 캠퍼스 간 전과제도가 “학벌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식의 학벌주의적 주장이 포함된 연서가 조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 허용 반대 주장은 지방 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 간의 단결에 해악적이다.

따라서 진보적 학생들은 전과 제도를 지지하면서 학교에 인프라 구축을 요구해야 한다.

전과제도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이 제도가 향후 학과 통폐합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전과제도를 찬성한다고 해서 통폐합을 자동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학생들 간의 단결을 해치는 방식을 지지하게 되면 향후 통폐합에 반대하는 투쟁을 할 때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재권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정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사회포럼 비정규직 차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연사: 윤종희 (기흥전자 조합원), 전지운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29일 (수) 오후 8시
장소: 건국대학교 수의대 306호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문의: 010-9372-2746

서울 서부 사회포럼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연사: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일시: 2011년 1월 13일 (목) 오후 8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서울 남부 사회포럼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 오늘날 제국주의

연사: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시간: 2011년 1월 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1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3천 5백 원 (학생 2천 5백 원)
문의: 010-2401-1987

경기 남부 사회포럼 신자유주의의 대안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反)자본주의인가?

연사: 정중남 (다함께 활동가)

일시: 2011년 1월 14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먹자골목 지나서 농협4거리 왼쪽 ‘토방’ 건물)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성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청이 최근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에 사무원(5급) 이상 8명을 퇴출시키더니 12월엔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퇴출했다. 이 가운데는 임용된 지만 4년 된 공무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작 이 일을 추진할 정규직 공무원은 퇴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 성명대로 이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경기도청도 최근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이란 걸 도입했다.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퇴출 대상으로 몰아 쥐어짜며 강제 퇴출을 합리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무원 퇴출제는 2007년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시작했다. 2007년 당시 오세훈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쪼먹고 있는 극소수의 부적격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를 거부한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입 첫해에 ‘제비뽑기’로 퇴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 기준도 모호해, 공무원노조는 “쫓 서기와 눈치 보기를 심화시켜 공무원들을 불안감에 시달리게 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년 동안 퇴출 대상자로 지목됐던 2백32명 가운데 64명이 퇴출됐다. 교육 과정에서 두 명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죽었다고 한다. 공무원 퇴출제에서도 “해고는 살인”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리로 얼룩진 자들은 고위직에 임명돼도 감싸면서 하급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퇴출의 칼날을 휘두른다.

고용 불안을 확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권 눈치 보거나 조장할 공무원 퇴출제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수석부지부장

교사 길들이기 본색을 드러내는 교원평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2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모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 1천56명에 대해 장·단기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수단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교원평가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교원 구조조정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이에 전교조는 강제연수가 교사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논쟁했다.

교원평가는 이미 많은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수업을 본 적 없는 학부모들의 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켜 이루어진 평가”,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근무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교과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교사들의 경쟁 구도 속에 교무실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있다”

교사를 통제하려는 교원평가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교사 간 경쟁이 아닌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사·학생 협의회를 통해 수업을 놓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당선자는 ‘교원평가 반대 투쟁이 다소 과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전교조가 제시한 ‘동료 평가 폐지, 서술형 의견 조사, 자율적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김의창 전교조 조합원

현 국제 정세와 반자본주의자들의 과제

다음은 12월 12일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이다. 녹색과 번역에 전문통역자들이자 다할게 회원들인 박준규와 천경록이 수고해 줬다. 한국 관련한 최일봉 동지의 말은 <레프트21> 독자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을 듯해 상당 부분 생략했다. [] 부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레프트21>이 삽입한 구절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먼저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상황에 대해 보고하자.

키아런 앨런(아일랜드 SWP): 아일랜드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2년째 극심한 긴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로 경제가 더욱 침체했고, 그래서 심지어 아일랜드 국채를 보유한 영국, 그리스 투자자들도 아일랜드 지배계급에게 어떤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몇 달 사이 대적인 자본 이탈이 일어났다. 이제는 IMF가 EU와 함께 아일랜드를 사실상 통제하려고 들어왔다.



그리스 노동자 투쟁 아일랜드에서 사적된 위기가 그리스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좌경화하고 있다. 그들은 좌파적 연대를 사용하는 좌파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 당으로, 일부는 더 나아가 신생 좌파연합으로 기울고 있다.[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SWP,IE)은 이 연합체에 참여하고 있다.] 1월에 열릴 좌파연합 대의원대회에 최대 1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에서 20명의 후보를 내고 국회의원 5~10명을 당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치 상황이 변하고 있다.

계급투쟁 상황에 관해 말하면, 아일랜드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정부한테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에 깊이 연루돼 있다. 이는 여러 모로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이번 시위를 평가절하했고, 노동자들이 대한중의 임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공공직을 삭감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렸고, 최소한의 생계대가를 시위만 조직했다. 비록 이번에는 노조 지도자들이 10만 명 규모의 행진을 조직하기는 했지만, 운동을 전진시킬 전략이 없었으므로 행진 참가자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학생들에 관해 말하면, 아일랜드 학생들은 '켈트 호랑이'[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의 아일랜드를 가리키는 말] 호황 중에 사실상 탈정치화했다가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아마 그 변화 속도는 영국보다는 느릴 것이다. 학생들이 반하고 있다는 첫 조짐은 약 4만 명 규모의 학생 집회였고, 그리고 학생 운동 내 좌파들이 연합해 주도한 2천~3천 명 규모의 점거 투쟁에서 나타났다. 좌파 학생 운동은 대학 내에서 이제 막 결집되기 시작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 그리스 상황은 아일랜드 상황의

표에서 10만 표로 뛰었고, 지방의원 7명과 시의원 15명을 당선시켰다. 파업 운동에서는 파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직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지금까지 모든 파업이 CUT[그리스 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이번엔 달라진 점은 현장 조합원들의 활동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들이 일부 파업을 이끌기도 했다. 특히 노조 지도부가 매우 우파적이고 타협적이었던 언론 노조에 그랬다. 다음 주에 벌어질 파업도 그렇지만, 지금껏 벌어진 더 소규모의 산발적 파업들도 아래로부터 세운진 파업 조율 위원회가 주도한 것들이다.

이처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기세가 높아진 반자본주의 좌파들이 새물결 떠오르고 있는 기층 노동자들의 운동에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는 않다. 대부분의 반자본주의 좌파들이 새로운 상황에 너무 보수적 것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반자본주의 좌파들이 추구해야 할 과제다.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점거 물결이 한 차례 일었다. 영국의 학생 운동이 그리스 학생들의 전투성 부활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대체로 말해 지금의 그리스 상황은 6개월 전보다 더 진일보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상황은 12월 10일의 첫 학생 시위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여러 모로 전형적인 학생 운동, 즉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여러 차례 봐 왔던 학생 시위나 점거(공식 학생회를 일부 우회하기도 하고 용하기도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원초적이고 거의 봉기에 가까운 운동과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일 준비 학교와 직업 학교 학생들은 대학살보다 훨씬 노동계급적이다. 이들은 현재 의결 중인 등록금 인상안으로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16세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폐지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의 운동에는 어떤 원초적인 성격이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경찰이 악당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발견이지만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경찰과 부딪힌다. 어떤 점에서 이 운동은 학생들에게 경멸과 맞장 뜰 수 있는 더 크고 유리한 무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러나 정치 지평 전체가 바뀌었다. 우리

12월 9일 시위가 그토록 폭발적이었던 것이다. 이번 시위는 첫 시위와 별개였고 비공인 시위여서 전국학생회(NUS)를 우회조직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지금까지 모든 파업이 CUT[그리스 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이번엔 달라진 점은 현장 조합원들의 활동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들이 일부 파업을 이끌기도 했다. 특히 노조 지도부가 매우 우파적이고 타협적이었던 언론 노조에 그랬다. 다음 주에 벌어질 파업도 그렇지만, 지금껏 벌어진 더 소규모의 산발적 파업들도 아래로부터 세운진 파업 조율 위원회가 주도한 것들이다.

이처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기세가 높아진 반자본주의 좌파들이 새물결 떠오르고 있는 기층 노동자들의 운동에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는 않다. 대부분의 반자본주의 좌파들이 새로운 상황에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반자본주의 좌파들이 추구해야 할 과제다.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점거 물결이 한 차례 일었다. 영국의 학생 운동이 그리스 학생들의 전투성 부활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대체로 말해 지금의 그리스 상황은 6개월 전보다 더 진일보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상황은 12월 10일의 첫 학생 시위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여러 모로 전형적인 학생 운동, 즉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여러 차례 봐 왔던 학생 시위나 점거(공식 학생회를 일부 우회하기도 하고 용하기도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원초적이고 거의 봉기에 가까운 운동과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일 준비 학교와 직업 학교 학생들은 대학살보다 훨씬 노동계급적이다. 이들은 현재 의결 중인 등록금 인상안으로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16세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폐지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의 운동에는 어떤 원초적인 성격이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경찰이 악당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발견이지만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경찰과 부딪힌다. 어떤 점에서 이 운동은 학생들에게 경멸과 맞장 뜰 수 있는 더 크고 유리한 무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러나 정치 지평 전체가 바뀌었다. 우리

는 실질적인 사회적 저항이 존재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저항은 학생들에게서 시작됐으므로 매우 전투적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일부 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전보다 많다. 진정한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슈테판 보르노스트(독일 마르크스21): 분명 저항의 측면에서는 사태가 극적으로 변했다. 특히 지난달 금융 위기 이후로 EU를 둘러싼 저항이 그렇다. 그러나 독일에서 가장 큰 쟁점은 EU의 정치 위기에 관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독일 지배계급이 국제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어젠다가 있다. 알다시피 독일 경제는 호황이다. 독일 수출 산업의 높은 경쟁력 덕분에 실업률은 15년 만에 가장 낮아졌고, 독일 지배계급은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 해 왔다. 이것이 문제의 국 제적 어젠다 전체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첫째, 독일이 EU의 다른 회원국들에 계속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독일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투자를 지키려 애쓴다. 독일 은행들이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므로 독일은 이들 나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더 높이려고 손을 뻗고 있다. 이들 나라의 예산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알다시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실세는 독일과 프랑스다. 그래서 독일 측의 이런 [도가 넘은] 주장은 마찰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다른 EU 회원국들이 독일 은행들에 진 부채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 현재 투쟁 물결의 시작을 알린 그 시위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상당수 학생들도 거기에 참가했다. 우리는 그때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 한 점에서 이 시위는 이후 사태의 예고편이었다.

학생 운동 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 그 때로 우리는 시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이 신인 당원들을 간부로 훈련시켜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1970년대 초 이래로 전투적 학생 운동의 전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지평 전체가 바뀌었다. 우리

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2011년 EU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모순은 해결될 가망이 없다. 독일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매우 강경하게 고수할 태세다.

둘째, 독일에서도 긴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7~8년 동안 이미 이러한 긴축이 조금씩 진행돼 왔으므로 그 강도는 아일랜드나 그리스와는 다르다. 오랫동안 코포라티즘[사회적 합의]에 길들여진 노동운동은 현재의 과제에 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독일 전역에서 10만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그중 5만 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 시위는 실질적으로 정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시위가 아니었다. 독일 노조들 대부분은 수출 확대 전략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해 왔다.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리스 반자본주의 좌파들이 제 공하러 애쓰는 것과 같은 대안적 지도력을 제공하려 애쓰고 있다.

셋째, 아일랜드 동지나 말한 개혁주의적 좌파의 부상이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나라마다 사태의 수해를 보는 세력은 다른 듯하다. 독일의 경우 핵 에너지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이 있다. 이로부터 수혜를 본 주된 세력은 침체하고 있는 사민당도, 다름게[좌파당]도 아닌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두 배로 커졌고, 사상 처음으로 주(州) 선거에서 사민당을 앞질렀다. 또한 녹색당은 연방 선거에서 제1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정당이다. 이는 야당 쪽의 이데올로기를 독점해 온 좌파에게 큰 도전이다. 이 큰 좌파는 보수적 자유주의 정부에 맞선 공 동전선 속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녹색 정치와 관련해 이데올로기의 갈라림을 날카롭게 버려야 할 것이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앞질러 보자. 슈테판이 제기한 유럽연합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말이다. 예상되는 한 가지 전망은 유럽 연합 지배자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유럽 국가 중 하나가 부도 사태에 빠지는 등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아마 그리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일 수도 있다. 만약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지배계급들이 고집하고 있는 방침이 사태를 이 방향으로 몰

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스가 아무리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현한다 해도(저항이 워낙 거세서 어차피 강력한 긴축은 어려울 게다)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지속 불가능해 앞으로 1년 혹은 2년 내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꽤 있다. 이로 인해 유럽 연합이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미래 전망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디플트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냐는 그리스 동지의 질문은 현재의 과제에 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독일 전역에서 10만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그중 5만 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 시위는 실질적으로 정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시위가 아니었다. 독일 노조들 대부분은 수출 확대 전략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해 왔다.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리스 반자본주의 좌파들이 제 공하러 애쓰는 것과 같은 대안적 지도력을 제공하려 애쓰고 있다.

셋째, 아일랜드 동지나 말한 개혁주의적 좌파의 부상이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나라마다 사태의 수해를 보는 세력은 다른 듯하다. 독일의 경우 핵 에너지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이 있다. 이로부터 수혜를 본 주된 세력은 침체하고 있는 사민당도, 다름게[좌파당]도 아닌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두 배로 커졌고, 사상 처음으로 주(州) 선거에서 사민당을 앞질렀다. 또한 녹색당은 연방 선거에서 제1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정당이다. 이는 야당 쪽의 이데올로기를 독점해 온 좌파에게 큰 도전이다. 이 큰 좌파는 보수적 자유주의 정부에 맞선 공동전선 속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녹색 정치와 관련해 이데올로기의 갈라림을 날카롭게 버려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실세는 독일과 프랑스다. 그래서 독일 측의 이런 [도가 넘은] 주장은 마찰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다른 EU 회원국들이 독일 은행들에 진 부채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 현재 투쟁 물결의 시작을 알린 그 시위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상당수 학생들도 거기에 참가했다. 우리는 그때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 한 점에서 이 시위는 이후 사태의 예고편이었다.

학생 운동 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 그 때로 우리는 시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이 신인 당원들을 간부로 훈련시켜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1970년대 초 이래로 전투적 학생 운동의 전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지평 전체가 바뀌었다. 우리

이는 한국인들이 차별이 없는 세상과 평등을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섯째는 장하준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한국인들이 시장을 깊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같은 반시장주의 경향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조합원 5백 명이 공장을 점거한 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여론이 공장 점거와 같은 행동을 지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다섯 가지 사건 중에서 두 개의 사건이 가장 중요했고 지배적이었다. 하나는 남북한 상호 포격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투쟁이다. 전자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그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한층 더 넓히고 있는 상황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투쟁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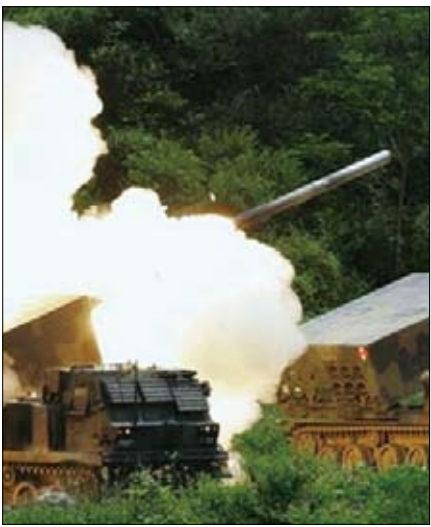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현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동맹을 맺어 인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연히 개혁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 소심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매우 소심했고 심지어 기만적이기까지 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그랬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보다 훨씬 더 크고 영향력이 있다. 기층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에 매우 공감했음에도 정규직 지도부는 투쟁을 배선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천안함 침몰사건과 남파 회의[영국 SWP와 프랑스 NPA가 공동 주최한]도 아직 연대 행동을 조직할 역량을 갖춘 기구는 못 되는 듯하다(내가 너무 비판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한반도 사태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

최일봉(다함께 국제연락간사): 남한 정세를 특징짓는 다섯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남북한과 북한 사이의 포격 사건이다. 둘째는 해군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의 침몰이다. 셋째는 남북한 상호 포격 사건과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파업이었다. 넷째는 마이클 셀렐의 책 《정당한 무엇인가》가 한 집하고 있는 방침이 사태를 이 방향으로 몰

파노스 가르가나스: 남한 [김영하] 동지가 쓴 성명서[레프트21] 지난 호에 논설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실릴를 보면 이런 전쟁 시도에 맞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끝맺는데 운동의 요구로 내세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일봉: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영향력 확장 노력을 멈추는 것과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 한다. 물론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확대 반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소위 '반제국주의 투쟁' 전술에 대해서도 더 적은 비중이지만 비판을 하고 있다. 북한 관료의 행동을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볼 수는 없다. 포격이나 핵무기 개발은 미국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군사 행동이나 핵무기 개발은 남한 노동계급을 소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천안함 침몰사건과 남파 회의[영국 SWP와 프랑스 NPA가 공동 주최한]도 아직 연대 행동을 조직할 역량을 갖춘 기구는 못 되는 듯하다(내가 너무 비판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천안함 침몰사건과 남파 회의[영국 SWP와 프랑스 NPA가 공동 주최한]도 아직 연대 행동을 조직할 역량을 갖춘 기구는 못 되는 듯하다(내가 너무 비판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천안함 침몰사건과 남파 회의[영국 SWP와 프랑스 NPA가 공동 주최한]도 아직 연대 행동을 조직할 역량을 갖춘 기구는 못 되는 듯하다(내가 너무 비판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최일봉: 이번 경우 그렇지 않았다. 민주노

동당은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였다. NGO들은 양면로 입장이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에 대한 보고하겠다. 10월 말에 열린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는 NPA가 발의했지만 NPA는 SWP와 NPA가 공동으로 주최하자는 식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천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여전히 NPA가 사실상 조직했고 파리에서 열렸다. 대체로 FI[제4인터내셔널]과 IST[국제사회주의경향] 소속 유럽 단체들과 그 유관단체들이 참가했는데, 내 생각에 독일 측에서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FI나 IST가 아닌 몇몇 중요한 단체들도 참가했다.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에서도 왔고, 덴마크의 적색연합도 왔고, 노르웨이 적색당 당원들이기도 한 IST 동지 두 명이 임시비로 참석했다. 노르웨이 적색당은 마오주의 단체들이 만든 제법 크고 광범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정당이다.

참가자 구성이 IST와 FI에 국한되지 않은 것은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NPA는 비록 [LCR 시절보다] 저변을 크게 확대하긴 했지만 선거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프랑스 공산당과 좌파당이 참여하는 좌파전선에게 어느 정도 밀려난 셈이다. 내 생각에 좌파당 지도자 뮐랑송은 자신과 좌파전선을 프랑스 급진좌파 진영의 단결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내세우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고, 그 때문에 NPA는 주변화되어 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것이 유럽 수준에서 낳은 결과는, 유럽 좌파당과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강경 좌파 사이의 갈등이다. 포르투갈 좌파블록의 참여가 중요했던 이유는 FI 세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좌파블록은 NPA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SWP와도 마찬가지로. 10월 3일 좌파블록 회원 한 사람이 버밍엄 집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그는 그 날처럼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행진하는 모습을 생전 처음 봤다고 했다. 포르투갈에서는 그런 행진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좌파블록은 유럽 좌파당에 속해 있기도 해, 그 성향이 강경 좌파들보다야 조금 오른쪽이다. 이처럼 IST와 FI 보다 더 광범한 스펙트럼의 단체들이 참가한 것은 유용했다. NPA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좌파블록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일봉: 이번 경우 그렇지 않았다. 민주노

» 10월으로 이어짐



12월 14일 로마에서 벌어진 베를루스코니 반대 시위 유럽 전역에서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Stylor 9en

영국 학생 시위

학생 시위가 보수연정을 뒤흔든 날

12월 9일 등록금 인상 법안 표결로 영국 '민주주의'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다.

보수당과 그 푸들인 자민당은 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9천 파운드까지 인상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엄청난 대중적 반대와 자민당의 총선 전 공약이 등록금 인상 반 대였음에도 말이다.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킬 줄 모른다. 평화적인 저항을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공격하기도 한다. 수많은 학생과 일부 노동자들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은 표결을 하던 날 런던 중심가를 장악했다. 이날에도 경찰은 지난 몇 주 동안 세 차례나 통제력을 상실한 뒤로 다시 통제력을 잃었다.

학생 수천 명은 팔러먼트광장을 차지했다.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을 돌파했다.

집회는 거리 공연과 다름없었다. 학생들은 의사당 앞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저런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더 가깝다.” 또 “우리는 어리고 가난해서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

시위대가 폭죽을 쏘자 연기 냄새가 진동했다. 음악 소리가 광광 울리고 사람들은 몸을 던지려고 불을 피웠다. 몇 분마다 폭죽 소리도 들렸다.

그때 말을 탄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밀고 들어왔다. 그러자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어느 여성은 경찰이 기습한 뒤에 맨체스터 대학생인 자신의 친구가 쇄골이 부러진 채 병원에 실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가방에는 피가 튀어 있었다. 다른 학생들의 머리에서 흐른 피가 묻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이 야만적으로 공격했지만 시위대는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펜스, 콘크리트, 가벼운 벽돌과 플래카드 막대기로 스스로 방어했다.

학생들은 경찰에 포위됐으면서도 마치 그 자리의 주인인 듯 보였다. 한 시위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런던 일부가 우리 것이 된 것 같아.”

“우리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지지했습니다.

학생들이 파업 때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찾아갈 차례입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달빛 아래에서 춤을” 이라는 노래가 들렸다. 등록금 인상 법안 통과가 발표되자 라디오를 가진 학생들이 확성기에 라디오를 연결했던 것이다. 아유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환희

분노한 학생들이 재무부 건물의 유리창을 박살냈다. 진압 경찰 일부가 그 건물에 진입했는데 이들은 곧 “누가 누구를 가두겠다는 거야?” 하고 외치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였다.

바깥에 있는 학생들은 건물 안에 있는 경찰을 조롱했다. 한 경찰이 재무부 건물 창 밖으로 곤봉을 휘두르려 하자 한 학생이 곤봉을 잡고 높이 들어올렸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이제 대법원으로 향했다. 게다가 더 많은 학생들이 옥스포드 거리에 있는 톱샐[영국의 캐주얼브랜드]의 유리창을 부수고 황태자 찰스와 그 비인 카밀라가 탄 차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저들의 목을 자르자[찰스 1세처럼]”

시위대는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부와 권력의 상징들을 공격했다. 학생들은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가 고통을 겪는 세상에 넌더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시위에는 진정한 계급적 분노가 깔려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BBC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빈민가 출신이에요. 무슨 수로 9천 파운드를 낼 수 있겠어요?”

시위대 행렬을 바라보던 많은 노동자들이 학생들을 지지했다. 거리 청소노동



영국 학생들은 켜켜이 쌓여 온 계급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자인 일마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항은 저들의 권리입니다. 내게 자식이 있다면 나도 행진할 겁니다.”

이 엄청난 학생 운동에서는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함께 운동의 약점도 드러났다.

경찰과 미디어 공격에 맞서 학생들을 방어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자신의 작업장에 저항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지지가 관건이다

학생들의 저항이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노동조합도 투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학생들을 지지한다. 노동자들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

는 혐오스러운 정부에 대충이 맞서 싸운다는 점에 고무를 받는다.

그러나 공식 노동조합 진영의 지지는 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주 항의 시위 직후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재빠르게 경찰 폭력을 비난하고 저항의 권리를 옹호했어야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학생들을 지지했고 항의와 점거에 가담했다.

맨체스터 대학생인 제미 우드커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장거리 버스를 빌릴 돈을 마련하려고 학생들을 지원하자고 호소했어요. 노동조합원이나 부모님들 덕분에 1천 파운드나 모았어요.”

심지어 일부 노동자는 학생 시위에 참

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런던 북부의 이슬링턴 식품 칼리지의 교사들도 만장일치로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인근의 스토크 뉴잉턴 칼리지의 교사들도 참여했다. 교사 55명이 진정을 한 뒤 교장은 교사 대표 네 명과 학생 두 명이 배너를 들고 참가하는 데 동의했다.

여러 노조에서 온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의사당으로 가는 행진에는 배너가 적어도 17개나 보였다. 철도산별노조(RMT), 공무원노조(PCS), 통신노조(CWU), 교원노조(NUT), 공공서비스노조(Unison),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가 합친 유나이트(Unite), 대학노조(UCU) 등이 참여했다.

철도산별노조 런던 지역 조직자인 스티븐 해들레이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조합은 여러분을 1백 퍼센트 지지합니다.”

의무

철도노조 대의원들도 학생들과 함께 행진했다. 철도노조 패딩턴 제1지부의 지부장 에디 뎀프시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지지했습니다. 학생들이 파업 때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찾아갈 차례입니다.”

유나이트 소속의 버스 노동자 20여 명도 참가했다.

통신노조의 전국교육담당인 트리쉬 레벨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회에 참가해서 저항하는 학생들과 협력하는 것이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조합원들이 학생들에게 무척 고무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보수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자고 요구하면서 노조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 경찰, 미디어의 공격에서 학생들을 방어해야 한다.

새디 로빈슨,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형석

》9면에서 이어짐

그러자 NPA는 제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를 예전의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처럼 6개월 주기로 계속 개최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예전의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는 2000년대 초에 시작됐다가 NPA 프로젝트가 떠오르면서 흐지부지됐다. 우리는 다음 번 대회를 내년 5월 또는 6월 중에 런던에서 주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1월 SWP 당대회 직후 파리에서 SWP와 NPA 지도부 대표들 간의 공동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협력은 지속될 것 같다. 그리스 급진좌파 중 기회주의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세력인 시나스피스모스가 분열하고 반자본주의 좌파 연합인 안타르시아가 지방 선거에서 약진한 것은 유럽 전체 수준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는 상당히 유용했다. NPA 지도부는 특히 SWP와 협력할 의향을 밝혔다.

물론 여기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SWP와의 협력은 NPA 프로젝트를 구상한 인물인 사바도의 개인적 기획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NPA 지도부 내의 더 젊은 세대 중 사바도와 의견이 같은 사람



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NPA의 젊은 세대 지도부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지배 조직의 회원인 에니나 동지가 NPA 집행위원이고 이번 대회 조직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슈테판 보르노스트: 대회에 참가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해당 주말에 전국적 집회가 두 개나 잡혀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첫째, 프랑스에서는 NPA가 공산당과 좌파당에게 크게 한 방 먹었는데, 문제는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이다. 시나스피스모스가 위기에 빠진 과정이 매우 시사적이다. 위기에 빠지기 전만 해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시나스피스모스 지지율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우리 같은[반자본주의 좌파] 정당들이 약진했다가도 급진화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급속히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유동적이었다.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프랑스도 비슷한 것 같다. NPA 동지들도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둘째,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것은 관찮은 생각이다. 현존하는 세력으로는 유럽 국가 한 곳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범유럽적인 연대 운동을 벌이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는 그러한 유형의 행동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런던에서 열리는 다음 번 대회에서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등의 민중에게 연대하는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는 문제, EU의 문제,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독일 문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 분명 EU 내에서 커다란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내 생각에 독일 지배계급은 그 과정에서 자국의 수출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독일은 필요하다면 분명 유로존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둘째, NPA의 불분명한 사고에 대한 파노스의 지적은 옳다. 그러한 불명료함은 뿌리가 깊은데, 왜냐하면 급진좌파가 이탈리아에서 그랬듯이 중도좌파와 연합한 것은 완전한 재앙이었다는 사바도의 믿음이 NPA 창립의 기초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한 재앙을 피하려면 비교적 원칙적인 반자본주의 좌파와 더 온건하고 기회주의적인 좌파 사이에 날카로운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떤 수준에서는 이러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은 NPA 내에 모종의 최대강령주의적 태도를 조장했다. 듣기 좋은 추상적 구호만 내세우면 사람들이 자기를 쪽으로 끌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태도 말이다. 이런 태도는 2005년 말 유럽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때부터 드러

났다. 그들에게는 좀더 온건한, 반신자유주의 좌파의 일부를 능동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좌파당에게 당한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시나스피스모스를 둘러싼 혼란을 계기로 반자본주의 좌파들의 재결집이 시작된 반면, NPA는 그러한 일을 할 의향을 보이지 않는다.

NPA 쪽에 우리가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NPA의 내분이 워낙 심각하고, 2012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를 놓고 정말 황당한 내분을 가깝스로 피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다음 번 반자본주의 좌파 회의는 더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지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위기가 깊어지면 우리는 여러 수준에서 개입해야 할 듯하다. NPA도 그 대상 중 하나다. 그러나 그밖에도 포르투갈 좌파블록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활용해 비교적 협소한 요구를 기초로 더 광범한 연대 캠페인을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포르투갈 좌파블록과 독일 마르크스21은 유럽 급진좌파 내의 상대적으로 좀더 개혁주의적인 세력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며, 우리는 이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인민전선의 역사적 경험에서 배운다 ②

재앙으로 끝난 1936년 프랑스의 계급연합

[편집자 주] 지금 대다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노동계급과 자본가 자유주의 세력의 체계적인 계급 협력을 가리키는 인민전선의 한국판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인민전선은 모두 비극적이거나 우울한 결말을 맞이했다. 인민전선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 첫 연재(레포트21> 45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 인민전선 경험을 다룬다. 앞으로 스페인, 미국, 칠레, 중국, 해방정부의 조선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1930년대는 위기의 시대였다. 경제는 대공황에 허우적맸고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파시스트가 권력을 잡았다. 독일의 히틀러가 군비를 늘리며 세계대전 위협이 높아져 갔다.

프랑스도 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농민과 중간계급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이 상황에서 극우파들도 세를 늘려갔다. 극우단체 회원이 1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프랑스에서 파시즘의 위협은 실질적이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은 것에 한껏 고무된 이들은 1934년 2월 6일 의사당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급진당(이름과 다르게 전혀 급진적이지 않은 중간계급 기반의 친자본가 정당이었다) 달라디에 정부는 사실상 강제로 퇴진당하고 우파 정부가 들어섰다.

노동자들은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2월 12일 하루 총파업을 호소하고 사회당도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굶뿔지만 공산당도 따로 시위를 준비했다. 당일 노동자 1백만 명이 파리 시내를 뒤덮으며 파시즘에 맞섰다.

따로 행진을 시작한 사회당과 공산당 대열이 행진 과정에서 합쳐지자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반파시스트 구호를 외치며 하나가 됐다. “이런 조우가 기뻐 날 뿔 것 같은 열광을 촉발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단결! 단결!’의 박수갈채와 구호들과 함성들.”

노동자들은 단결을 원했고, 정말이지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미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의 재앙적인 정책(3기 ‘초좌익주의’)으로 독일 공산당은 사회당을 파시스트와 다르지 않은 ‘사회파시스트’라 규정하고는 공동투쟁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히틀러는 손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이런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동전선 즉,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했다.

파시즘의 위협 앞에서 프랑스 좌파는 단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단결의 범위가 노동자 정당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공산당과 사회당뿐 아니라 중간계급 정당인 급진당도 연합을 한 인민전선이 결성됐다. 파시즘에 맞서려면 계급을 뛰어넘는 광범한 연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히틀러의 권력 장악에 위협을 느낀 소련 지배자들은 영국·프랑스와 군사적 동맹을 맺어 독일을 견제하려 했다. 그래서 1935년에 코민테른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통일된 인민전선”을 채택했다. 코민테른이 애초 표방한 세계 혁명은 온데간데없고 소련 방위만 남은 것이다.

코민테른 총서기 디미트로프는 자본가 계급을 파시즘에 가까운 분파와 ‘민주’적인 분파로 나누고 ‘민주적’ 자본가들과 동맹을 주장하고 나섰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1936년 5월 선거에 공산당은 “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프랑스를 위해”라는 두루뭉술하고 민족주의적인 구호로 참가했다.

이 선거에서 인민전선은 큰 승리를 거둔다. 사회당은 97석에서 1백47석으로, 공산당은 10석에서 72석으로 의석을 크게 늘렸다. 급진당만 1백59석에서 1백6석으로 줄었다.

인민전선의 승리로 사회당 당수 레옹 블룸이 새 총리가 됐지만, 공산당은 장관을 배정받지 못했다. 블룸과 스탈린은 ‘빨갱이’를 장관에 앉혀 프랑스 지배계급



1936년 6월 프랑스 총파업 이 거대한 투쟁에서 계급연합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웠다.

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선거에서 좌파가 선전하고 제한적으로 경제가 회복하자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블룸이 총리에 취임하기도 전인 5월부터 파업 물결이 일어났다.

파업은 기계공업 부문에서 모든 산업 분야로,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초콜릿 공장, 인쇄소, 호텔, 식당, 극장, 자물쇠 공장, 백화점 등 노동조합이 취약한 곳까지 파업이 확산됐다. 6월에는 프랑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2백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1871년 파리 코뮌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파업 가운데 4분의 3은 점거파업이었다. 요구안을 정하기도 전에 점거부터 들어갈 정도로 전투적인 투쟁에 사장들은 경악했다. 노동자들은 사장을 감금하기도 하고, 공장에 붉은 깃발을 내걸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게임을 즐기고 노래를 부르며 파업을 즐겼다.

당시 사회당 좌파 마르소 피베르는 이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실제 노동자들은 사회전체를 바꾸고 싶어 했다.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던 사장들은 결국 6월 7일 마티농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 노동제(당시로는 획기적이었다), 2주 유급휴가제, 상당한 수준의 임금 인상, CGT 인정 등 대대적인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인민전선 지도부는 이런 투쟁을 고무하기는커녕 파업을 끝내고 투쟁을 정리하려 했다. 인민전선 정부의 내무장관 로제 살랑그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로서는 질서와 무정부 상태 사이에서 이미 선택을 했다. 나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총리였던 블룸은 나중에 당시 사장들이 자신을 ‘구세주’처럼 여겼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사장들의 진짜 ‘구세주’는 공산당 지도부였다.

노동자들이 이미 파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자 공산당 지도부는 본격적으로 투쟁을 억누르기 시작했



인민전선 정부 총리 레옹 블룸 기업주들을 그를 구세주처럼 여겼다.

다. 파업과 투쟁이 계속돼 소련의 동맹인 프랑스 지배자들을 더욱 곤경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공산당 서기장 모리스 토레즈는 “파업을 시작했으면 끝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공산당 일간지 〈뤼마니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며 “공산당은 질서를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영동한 데

새롭게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공산당을 자신들의 정당으로 생각했다. 1936년 초 9만 명이던 공산당 당원 수는 거대한 파업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연말에 29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얻은 권위와 노동자들의 신뢰를 영동한 데다 썼다. 노동자 계급의 잠재력을 한껏 끌어올려 투쟁을 전진시키는 게 아니라 투쟁을 통제하고 결국 잠재우는 데 이용한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민족주의 관점에서 독일에 반대하는 일부 우파까지 포괄하는 ‘프랑스인 전선’을 구성하자고 했다.

인민전선이라는 계급연합 정책에 매인 공산당은 공공연하게 자본가 편을 든 카미유 쇼탕이 총리가 됐을 때도 지지했다. 쇼탕 이후 더 보수적인 달라디에가 총리가 됐을 때도 지지했다.

공산당이 계급연합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지배자들은 반격을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개혁 가운데 하나였던 주 40시간 노동제를 되돌리려 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이에 저항했지만 처참하게 패배했다. 경찰은 체포한 노동자들에게 파시스트 식 경례를 한 채 “경찰 만세”를 외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 패배 후 자행된 대규모 해고와 탄압으로 노동자 운동은 완전히 후퇴했다. 1936년 파업 시작 전 78만 명이던 CGT 조합원 수가 파업 후 4백만 명으로 늘었다가 이런 탄압을 거치며 다시 1백만 명으로 줄었다.

나아가 1939년 9월 말 의회는 공산당을 불법화했다. 1940년 6월에 의회는 앙리 페랭에게 독재권을 주기로 했고, 페랭은 파시스트들이 포함된 정부를 구성해 독일이 프랑스 북쪽 절반을 점령하는 데 협력했다.

혁명세력의 마비

프랑스에서 이 같은 재앙을 낳은 인민전선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다.

첫째, 계급연합으로 우파나 파시즘의 준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히틀러와의 협잡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급진당 소속 총리 달라디에였다. 페랭

에 권력을 쥐 나치가 득세할 수 있게 한 것도 인민전선으로 선출된 의회였다.

1936년 여름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에서 파시스트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공화국을 지키려고 스페인 정부는 바로 프랑스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프랑스 사회당 소속 총리 블룸은 무기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급진당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블룸은 ‘비개입’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인민전선을 깨지 않으려다 보니 별다른 것을 할 수 없었다.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가 스페인에서 파시스트 군대가 일으킨 반란을 못 본 체한 덕분에 파시스트들은 독일과 이탈리아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다.(스페인 내부의 인민전선이 내전 패배에 끼친 영향은 다음 호에서 다룰 것이다.)

둘째, 인민전선은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며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갉아먹었다.

실제 프랑스 공산당의 활동과 주장은 인민전선이 설정한 한계 즉, 급진당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에만 머물렀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패배와 사기저하로 이어졌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거대한 총파업은 분명히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인민전선에 매인 공산당은 혁명이 아닌 ‘질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지도했던 트로츠키는 인민전선을 이렇게 비판했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정치연합은 그 기본 이해관계가 1백80도 반대인 두 계급 사이의 동맹인지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세력을 마비시키는 데에만 이바지할 뿐이다.”

재앙으로 끝난 인민전선 전략을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국의 진보진영 일부가 여전히 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민주노동당은 1930년대 프랑스 공산당에 견주면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민주당 바깥가량을 잡다 뒤통수만 맞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노동자 정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계급동맹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공동전선 즉, 노동자 계급 내의 동맹을 통한 공동 투쟁이다.

프랑스 인민전선을 두고 한 트로츠키의 말은 7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계급 정당은 파산한 정치꾼 정당을 구하려는 가망 없는 노력에 정신을 쏟아서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모든 힘을 다해 대중이 급진당의 영향력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박건희

인민전선은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며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갉아먹었다. 실제 프랑스 공산당의 활동과 주장은 인민전선이 설정한 한계 즉, 급진당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에만 머물렀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패배와 사기저하로 이어졌다.

2010년을 뜨겁게 달군 국제·국내 10대 이슈

천안함 침몰,

남북한 상호포격과 제국주의 준동

미국의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은 최근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빌미로 반대파를 제압하고 국내 저항을 단속하려 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대북 압박을 하나의 빌미로 북한에서 진행된 3대 세습은 북한이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며, 억압적인 독재 국가일 뿐임을 드러냈다.

자신감을 회복하며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

구조조정에 맞선 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 파업, 타임오프를 둘러싼 투쟁, KEC 점거파업, 동희오토·기륭전자 투쟁 승리 등 2010년에 노동자 투쟁은 활발하게 벌어졌다. 마무리가 아쉬운 투쟁도 있었지만 값진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이 투쟁들의 대미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한국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를 마비시키고, 지배자들을 쪼들매게 만들었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한편, 현대차 이경훈 지도부의 배신적 행태와 급속노조·민주노총·진보정당 지도부의 소심한 태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민주대연합

이명박 정부는 중간선거인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고 '친서민'도 내세우고 온갖 무리수를 썼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때문에 참패했다. 진보진영의 자신감은 높아졌다. 세종시 정부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분열 상황은 지방선거 참패로 더 심해졌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도 가속화했다.

한편 야권이 연대하면 한나라당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진보진영 대다수의 생각은 민주당·참여당과 연합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민주대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에 목매달며 노동자 투쟁(KEC 파업,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자제시키는 진보진영 지도자들의 태도는 민주대연합의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냈다.

유럽의 금융·재정 위기와 노동자 투쟁

유럽의 금융·재정 위기가 그리스·아일랜드를 넘어 포르투갈·스페인 등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은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진정시키려 하는 한편, 공공부문 임금 삭감, 연금·복지 삭감, 간접세 인상 등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경제 위기의 책임을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긴축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려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유럽 각국의 정치 위기도 고조될 것이다.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프랑스 노동자들의 연금 계약 반대 투쟁, 영국 학생들의 긴축 반대 투쟁은 유럽을 뒤흔들며 전 세계 노동자들을 고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렁,

오바마 정부의 위기와 중간선거 패배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점차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중단하기는커녕 아프가니스탄에 학살군을 증파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원래 부실한 안이 우파의 공격으로 완전히 누더기가 됐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로 직장과 집을 잃은 사람들이 급증하는데 부자 감세에 동의해 줬다.

지지자들의 배신감과 환멸이 커지면서 오바마 정부는 중간선거에서 패배했다.

오바마의 배신과 정치 위기는 진정한 평화와 개혁을 위한 아래로부터 투쟁과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대안 건설이 중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미·중 환율전쟁과 G20의 실패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위기의 책임을 타국에 전가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2010년에는 미중 간 환율 갈등이 격화했다. 게다가 북한의 핵 개발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 중일·러일 영토 갈등 등이 결합되면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도 높아졌다.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며 개최하는 G20 정상회담이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할 뿐이라는 점이 서울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명박은 G20 정상회담 개최를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며 G20 반대 운동을 탄압했다.

그러나 G20은 환율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G20 규탄을 주요 요구로 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 4만 5천여 명이 모였다.

중국 노동자 투쟁의 분출과

타이 붉은 셔츠 운동

유럽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물가가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또, 타이의 붉은 셔츠 운동 등은 민주적 권리 확대를 위한 운동의 성장도 보여 줬다.

경제적 요구를 내세운 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주적 권리 확대를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서로 결합시키려는 연속혁명의 관점에 설 때 투쟁은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투쟁 승리, 특히 중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투쟁과 격변은 전 세계 운동을 고무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구호선 공격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구호물자를 공급하려던 활동가들을 이스라엘 군이 공격해 9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다. 미 제국주의의 중동 경비견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봉쇄를 방해하는 구호 활동가들을 겁주려고 이런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 끔찍한 사건은 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항의를 더 확산시켰다.

아이티의 비극과 제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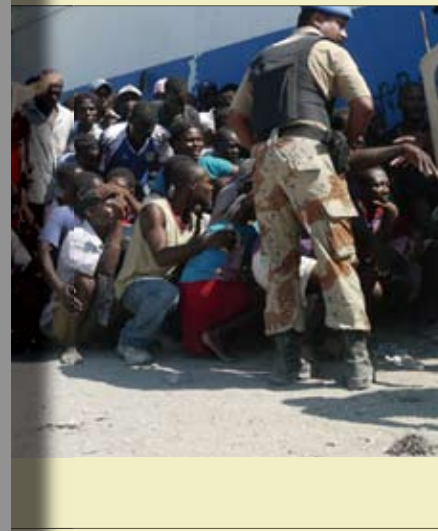
아이티에서 강진이 일어나 20만 명 넘게 사망하고 전 국민의 3분의 1인 3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끔찍한 피해는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때문에 증폭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티의 빈곤과 취약한 경제 기반은 프랑스·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억압·수탈 때문이다.

강대국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들먹였지만 아이티에 군대를 파견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사건

대형 석유회사 BP의 원유 시추 시설 사고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재앙이 일어났다. 이것은 막대한 이윤을 얻으려고 기후변화가 낳을 환경 재앙에도 아랑곳 않고 화석연료 채굴에 혈안인 기업들이 안전 장치 설치에 돈을 아끼다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오바마는 BP를 비난했지만, 금지됐던 멕시코만 석유 채굴을 허용하고 안전 장치 규제를 느슨하게 유지한 미국 정부도 대형 석유 기업들과 한통속일 뿐이다.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월 3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전북 버스 파업

억눌려 왔던 불만이 폭발하다

전북 지역 버스 작업장 일곱 곳에서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주시·경찰·사측의 합동 공세 속에서도 강고하게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 대오는 초기보다 늘었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율은 40퍼센트까지 떨어졌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격일제로 하루 평균 15~16시간 일하는 것도 모자라, 어느 땐 18시간, 또 어느 땐 다음날까지 쉬지 않고 일해 왔다. 그래도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백40만~1백60만 원 수준이었다. 더구나 무리한 근무로 사고율도 높았다. 최근 억눌려 온 불만이 폭발했다. 8월에 천사용차측의 한국노총 전북지역자

동차노조 지도부가 각 버스 사업주들과 직권조인해, 1인당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미지급 임금을 1인당 1백만 원씩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사측은 그동안 통상임금을 의도적으로 낮춰 각종 수당을 낮은 액수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다달이 1인당 4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착복해 왔다. 천사용 노조 간부들은 빼앗긴 임금을 되찾으려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했고, 야합과정에서 조합원들보다 두 배나 많은 임금 인상을 보장받았다. 이 때문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으로 상급노조를 변경하고 12월 8일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첫날부터 경찰은 조합원 76명을 강제 연행하는 등 강경 탄압으로 대응했

다. 사측도 용역강패를 동원하고 대체수송 수단을 투입해 파업 파괴에 나섰다, 10일에는 5개 회사가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전주시 역시 '선정상화·후조치'를 주장하며 사측 편에 섰다. 지방 정부와 사측이 이토록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협력한 것은 그들 사이에 조성된 더러운 유착관계 때문이다. 이번 파업 과정 중 폭로된 '운송원가 보고서'를 보면, 버스 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런 자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한 이기적인 파업"이라고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집회와 거리 행진, 농성투쟁 등을 진행하며 투지를 불태

우고 있다. "어용노조 간부는 우리를 등쳐먹고 속일 생각만 하다가 들롱났다. 그런 것이 쌓여서 폭발한 거다. 폭발한 이상 멈출 수 없다." 전북 버스 파업은 다른 버스 노동자들도 고무하고 있다. 최근 광주 급호고속 버스 노동자들도 사흘간 파업을 벌였다. 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0개 가까이 되는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번 투쟁이 승리한다면 전북 지역, 나아가 전국의 버스 노동자들에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병무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

점거농성 하루만에 승리하다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단호한 점거농성이 학생들의 지지 속에서 하루 만에 승리했다. 12월 15일 연세대학교 당국은 청소·경비 용역 하청업체 변경을 공개 입찰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조건에는 '미화원의 과실 및 비협조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3일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있었다. 이는 원청 사용자인 대학 당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조항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었다. 그래서 입찰설명회에는 노동자와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항의했다. 이후 총무처

가 있는 본관으로 집입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연세대분회 조합원 1백여 명과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다함께 서부지구, 서부비정규노동센터 등 30여 명이 연대했다. 본관 집회가 끝날 즈음 연세대분회 김경순 분회장이 발언을 요청했다. "확실히 답을 받기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답을 줄 때까지 조금 좁지만 함께 합시다" 하고 점거 농성을 호소했다. 영화 12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였지만 조합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연세대학교 본관 점거를 시작한 그날, 연세대학교 총무처 한태준 팀장은 집회

참가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보장하고 공개 입찰에 조합원과 공대위 구성원의 참관도 허용할 것을 약속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의 단호함이 승리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 몇 해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를 모으며 노동조합을 조직했고 투쟁에서 승리해 왔다. 올해 10월부터는 4개 대학 재단의 하청업체 아홉 곳을 대상으로 공동 투쟁과 교섭이 진행 중이다. 12월 10일에는 '청

소·경비 노동자 집단교섭, 공동투쟁 승리! 서부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해 연세대학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까지 행진했다. 정준영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당선자는 이날 "노동자의 오늘은 학생들의 미래"라며 연대 의지를 전했다.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당선자도 "연세대의 투쟁 소식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당국은 노동자와 학생들의 자신감과 활력을 꺾어 놓으려 했다. 하지만 또다시 노동자와 학생의 아름다운 연대가 승리했다. 박용석

동국대 미화노동자 투쟁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 준 동국대 학생들

동국대 미화노동자들이 98퍼센트의 높은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대학 당국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투쟁할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학생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있다. 미화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은 1주일 만에 9천3백 명으로 늘어났다(학교 정원은 1만 3천 명이다). 노동자들은 "승리하세요" 하고 격려하는 학생, 음료수를 건네는 학생, 투쟁을 지지하는 메보를 남기고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무됐다. 동국대 학생 활동가들의 노력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매일 등교 홍보전, 학내 1인 시위, 매주 연대집회 등을 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시험 기간인데도 연대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지속해서 늘었다. 노동자들의 저항과 학생들의 연대에 대학당국이 당황하고 있다. 동국대 전교생에게 메일을 발송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용역업체가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 것'이라고 변명해야 했다. 또한 12월 말 용역해지를 앞두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동국대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방학까지 기다려 보자는 꼼수일 수도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의 '아름다운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병규

범죄파가 선전한 전교조 선거 결과

전교조 신임 지도부 선거에서 대정부 투쟁을 강조한 범죄파 진영의 진영효·박옥주 후보가 투표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8.8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 범죄파 진영은 적은 표 차이로 안타깝게 낙선했지만, 지난 두 차례의 선거(2006년과 2008년) 때보다 각각 5.2퍼센트, 0.5퍼센트씩 많은 득표를 하며 좌파의 강력함을 과시했다. 특히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주장이 큰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값진 성과다. 이것은 지난 선거 때와 현 상황을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2008년엔 거대한 촛불운동 속에서 MB식 경쟁교육 반대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졌고, 그 속에서 민주당은 궤퇴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투쟁이 크게 분출하지는 못하고 있고, 운동 내에서 민주연합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탄압을 피해 진보교육감과 협력해 개혁을 추진하자는 온건파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 법도 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범죄파 진영은 굽히지 않고 좌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범죄파 진영의 여러 활동가들은 이 구동성으로 진영효 후보의 선명한 주장이 "신선한 자극을 주며 결속을 다지



합동토론회에서 연설하는 진영효 위원장 후보 그의 선명한 좌파적 주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

게 만들었다" 하고 말했다. "그동안 좌파도 선거주의에 타협하곤 했는데, 진영효 후보가 이런 타성을 깨게 해 줬다." 절반 가까이 되는 조합원들은 이번 후보를 지지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범죄파의 승리나 다름 없다. 이것은 진보교육감 당선 이래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범죄파 진영은 안타깝게도 서울지부장 연임에 실패했지만, 후보 간 표 차이가 1백95표 정도로 근소했던 것을 보

면 결코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서울의 주요 좌파 활동가들은 이명박 정부 2년간 징계 3관왕, 4관왕을 달 만큼 정부의 집중 탄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손발이 묶여 기층을 조직하는 데도 제약을 받았다. 선봉장 이명박 정부의 악랄한 탄압 속에 전교조 조합원 수가 2만여 명이나 줄어든 정도였고 서울 지역 좌파 활동가들이 그 핵심 표적이었다. 그런 탄압 속에 위축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자신감이 최근 회복되고 있는 수준을 볼 때, 서울에서 좌파 후보가 받은 지지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다. 개정교육과정에 반대해 투쟁을 이끌어 온 진영효 후보가 좌파 현장모임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넘는 넓은 층의 지지를 받았던 것을 보면, 서울지부장에 출마한 교찾사 후보가 특별히 약세였던 것도 아니다. 진영효 후보는 경기, 경남 등 전통적으로 온건파가 강했던 지역에서도 지난 선거에 비해 지지를 좀더 얻었다. 따라서 범죄파 진영은 이번 선거가 보여 준 가능성에 착목해 아래로부터 진지하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최근 장석웅 새 지도부는 우려스럽게도 경쟁교육 정책의 선봉장인 이명박 정부에게 '21세기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2012년 대선·총선을 겨냥해 민주·진보진영의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원평가 반대투쟁 같은 "다소 과한" 방식의 투쟁과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벌써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신임 지도부가 당선하자마자 교원평가에 따른 강제연수를 지시했다. 장석웅 당선자가 교원평가 폐지 요구를 "교사 이기주의"라고 폄훼하며 민

주당 등과 협력을 꾀한 것이 지배자들의 눈에는 공격을 서두를 '악한 고리'로 보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시화할수록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더욱 교활해질 것"이고 "교원평가, 일제고사, 2009 개정교육과정, 수능개편 등 결코 쉬운 것 하나 없"(〈교육희망〉) 중요한 과제들도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쟁의 압력을 넣을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좌파는 무엇보다 운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물음에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으며 조합원들의 정치적 자신감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의 위기와 투쟁 분출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진보교육감 당선이 낳은 기회를 공세적으로 움켜쥐려는 노력과도 맞물려야 한다. 정부의 심각한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는 멀지 않은 미래에 좌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유럽의 교사 노동자들이 투쟁의 중요한 일부로 나선 것처럼 말이다. 굳건한 좌파의 존재는 이럴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설

《21세기의 혁명》, 크리스 하먼, 8천 원, 1백76쪽, 책갈피

서평



21세기, 혁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20세기에 혁명은 가전제품이나 휴대 폰 따위의 디지털 제품이나 패션 또는 광고에나 붙일 법한 수식으로 취급받는 일이 흔하다.

한편, 한국의 좌파들 중 일부는 혁명을 언급하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는다. 혁명은 이미 오래된 기억 저편의 일이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이야기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저항과 항쟁은 민주적이라고도 실천적인 행동 같은 것이지만, 혁명은 왠지 불편하다고 여긴다.

이처럼 혁명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난무하는 “21세기에 혁명은 가당찮은 이야기인가?”라는 물음에서 《21세기의 혁명》은 시작한다.

풍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례와 경험을 보여 주고 교훈을 이끌어낸다. 매우 명료하고 쉽게 주제에 천착하며, 현재진행형으로서 혁명, 그리고 혁명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책의 저자이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인 크리스 하먼(지난해 작고했다)은 21세기가 시작된 직후 혁명의 가능성은 오히려 세계 도처에서 타올랐다고 지적한다. “21세기의 새벽을 맞이하기 직전인 1999년 11월에 발발한 시애틀 투쟁이 그 서막”이었다. 투쟁 당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라는 슬로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 슬로건은 10년이 훌쩍 넘는 현재에도 경제 위기에 따른 자본가들의 고통전가에 맞선 주요 반자본주의 투쟁과 저항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자 혁명의 잠재력이 곳곳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우익 쿠데타에 맞서 노동자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와 우고 차베스와 그의 정부를 방어했다.

이웃한 볼리비아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대중투쟁과 준(準)혁명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진보적 개혁강령을 내건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당선할 수 있었다. 당시 볼리비아의 광부들은 한 손에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행진하면서 노동계급의 전투성을 표출했으며, 이에 놀란 신자유주의 국가 수반인 대통령 로사다는 헬기를 타고 황급히 도망쳤다. 네팔에서는 봉기로 군주제가 타도되기도 했다. 21세기에 말이다.

책은 1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실제 벌어진 21세기의 역사적 사례를 생생히 보여 주고, 평가와 전망을 통해 혁명의 동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혁명의 동학을 이해하고 혁



12월 영국 학생시위 전 지구적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혁명적 격변의 조건들이 성숙해지고 있다.

명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흔하다. 예컨대 한국의 일부 좌파들은 혁명보다는 ‘급진적 개혁’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하다. 박노자 씨는 예전에 어느 한 논쟁에서 “혁명을 통해 폭력을 경험하느니 자본

주의 내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 좌파들은 ‘급진적 개혁’을 쟁취하는 데 수반되는 거대한 투쟁, 그리고 그 투쟁들이 혁명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않는

다.

그럼에도 《21세기의 혁명》은 ‘개혁주의자’들도 혁명이나 준혁명 시기에 외부적 압력에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와 교훈을 통해 ‘혁명가의 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혁명가와 혁명가들로 구성된 혁명정당이 혁명적 상황에서 운동의 전진을 위해 적절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혁명 정당이 “혁명이 시작되는 데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야만의 갈림길에서는 혁명 정당이 혁명이 승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듯 《21세기의 혁명》은 혁명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현재와 머지 않은 미래에 표출됐을 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취할 것인지도 매우 쉽고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두꺼운 참고서의 요약본(2백 쪽도 채 안 된다!)과 같다.

전 지구적 경제 위기라는 불씨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자본과 지배계급에 맞서 노동자 수백만 명이 공장을 멈추고 거리를 점거한 채 행진에 나서고, 학생들이 대학과 거리를 점거하는 모습은 연일 보도된다. 세계 도처에서 경제 위기,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지배계급의 내분과 대중의 점증하는 불만이 결합”될 때 촉발되는 혁명적 격변의 조건들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21세기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냐가 아니라 혁명이 어디로 나아가갈 것이냐다.”

일독을 권한다.

한성근 역자

2011년 총학생회 선거 결과와 좌파 학생들의 과제

지난 2년간 학생회 선거의 특징이었던 ‘운동권’ 총학생회의 약진은 올해 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는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부산대 등에서 조직좌파·범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른바 ‘비권’ 성향이 후보를 내지 못한 곳도 많았다. 특히, 이화여대 선거는 ‘기독교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의 학생들이 후보를 내지 못해 22년 만에 좌파 후보 단선으로 치렀다. 고려대는 지난해 ‘운동권’을 비판하며 출마한 ‘소통시대’ 경향의 선본이 학생들을 사찰한 것이 드러나 중도 사퇴해 두 좌파 선본이 대결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는 조직좌파 선본 셋과 ‘비권’ 성향의 선본 하나가 출마해 조직좌파 선본들이 모두 합쳐 88퍼센트를 득표했다. 2등과 8백 표 차이로 당선한 전국학생행진 경향의 ‘Action AGAIN’ 선본은 정치적 투쟁을 압도적으로 강조했다. 이들은 얼마 전 프랑스 총파업에 연대한 학생들처럼 “경제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희생으로 극복하려는 그 뻔한 시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서 투쟁하는 것만이 ‘대안’이고 ‘힘’”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 결과는 학생들이 급진화·정치화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학생들의 급진화는 2008년부터 촛불운동, 경제 공황, 용산참사 항의운동, 쌍용차 공장 점거파업,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 등을 거치면서 이뤄졌다.

올해는 청년·학생들이 대거 참가한 대중 시위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운동 상황과 급진화 수준 사이의 간극은 정치적 대안에 대한 갈망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한국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 진보적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미래, 한반도의 위기 때문에 대안을 애타게 찾고 있다. 올해 ‘김예슬 선언’의 파장,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수십만 부 팔린 일들은 급진화를 보여 준다.

하지만 조직된 좌파들이 학생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올해 학생회 선거에서 보여 준 학생운동의 잠재력은 학생회 좌파 활동가들이 더 광범한 학생들을 투쟁으로 이끌고 학생운동이 노동자 투쟁 등 더 큰 사회적 투쟁의 방아쇠가 되도록 노력할 때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장하준이나 마이클 샌델의 책이 혁명적 대안보다는 개혁주의적 대안 제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여 주듯이, 학생들은 급진화하고 있으나 대체로 혁명적 대안을 수용하기보다는 급진 개혁주의에 이끌리고 있다. 또, 기성 제도권 정치에 대한 환멸과(중종 비민주적으로 토론 없이 활동을 조직하는) 스탈린주의 운동의 경험 때문에 운동 조심자들은 학생회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곤 한다.

그래서 학생회 활동가들은 종종 각 대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관점으로 학생회를 운영해야 한다.

학 부문의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부문주의나, 인기 없는 투쟁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실용주의의 압력을 수용해 정치적 시야를 놓치기도 한다.

좌파 학생회 활동가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스탈린주의 운동에 대한 반감의 합리적 측면을 공감하면서도 학생회가 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되는지 실천과 논쟁 속에서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이때 어떤 정치냐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불만과 각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핵심 고리를 포착해 아래로부터 대중행동을 확대하려는 정치가 필요하다. 요구의 성격뿐 아니라 무엇보다 요구를 성취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좌파 학생들은 학생회를 운영할 때 계급적 연대를 놓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겪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는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각각의 문제들은 전체 계급 세력 균형의 영향을 받는 정부와 학교 당국의 대응, 대중의 정서와 자신감, 투쟁 등에 달려 있다. 예컨대 (지금은 누더기가 된) 취업후 상환제는 정부가 쌍용자동차 점거투쟁이 한창일 때 내놓았다.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질 때 정부는 다른 부문에 양보안을 제시해 투쟁 확산을 막으려 애쓴 것이다.

지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재정 긴축 정책의 여파로 제 2의 1968년란으로 불릴 정도로 학생운동이 분출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위기들은 학생들이 돌연 저항에 나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 등록금 인상 등으로 내년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저항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저항은 노동자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2011년 조직된 학생 좌파들의 능동적 구실이 중요한 이유다.

김세란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한미FTA의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인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다.

경총과 전경련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감안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난리였다.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가 한미FTA 추가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가 됐음은 분명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가 연평도 때문에 한미FTA에서 놀라운 양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이참에 보수 우파들은 한미군사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잡았다며 한미FTA 비준 촉구를 부르짖는다.

미국과 한국의 지배자들은 한미FTA를 자본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정치·군사적인 이익도 얻겠다는 전략을 세워 왔다.

지정학적인 경쟁 우위

미국 지배계급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 효과에 민감하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강화는 미국 지배자들로서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을, 그것도 동아시아에서 맺은 것은 중국 견제 효과를 내기에 안성맞춤이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지역 통합을 형성하는 것은 현재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 지배자들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통상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지배자들은 이것을 견제하고 싶어 했다.

미국 정부가 2006년부터 한미FTA를 서둘렀던 것도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2006년 6차 회담 종결 이후 ‘전략적 유연성’ 등을 추구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 미국은 FTA를 추진함에 있어 외교·안보적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 미국 최초의 양자 간 FTA인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중동정책을 반영한 결과이다. 미국이 미주 지역의 FTA를 결성하려는 것도 넓게 보면 중미의 민주주의 확립[미국 정책에 친화적인 정부 세우기-옴진이]에 대한 관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요르단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중동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요르단의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은 미·요르단 FTA를 기반으로 이집트, 바레인, 오만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2013년까지 중동자유무역지대 협정(MEFTA)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동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런 시도의 한편에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점령, 폭격과 민간인 학살이 벌어져 온 것이다.

이처럼 무역정책과 군사 안보 전략의 결합을 더 강화하는 것은 2001년 9·11 이후 미국 지배계급의 중요한 전략이었다. 미국의 안보전략문서는 “오늘날 무역협정은 냉전시대 안보조약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와 같은 전략은 오바마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오바마는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linchpin : 수레나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이라는 뜻)”이라며 한미FTA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물론 남한 지배계급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없이 단순히 미국의 압력

에 복종한 것은 아니다. 한국 지배자들도 미국과 FTA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여기고 나름의 전략을 추구해 왔다.

린치핀

우선 경제적으로는 한미FTA의 “외부 충격”을 통해 국내에서 시장화·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 한다. 나아가 남한 지배계급은 한미FTA를 통해 미국과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는 위치에 서고 남북관계에서도 더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전략적 판단과 이해관계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추구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것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불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아시아 외교’로 부르지만 두 정부 모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미FTA를 추진해 왔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레임덕 상황에서 지지층의 반발도 무릅쓰며 한미FTA를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 쇄고기까지 수입하려 하면서 한미FTA에 매달렸던 것이다.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등에서 일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재협상 타결에 매달렸다. 이런 안보 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 같은 긴장을 더 앞당길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말하는 “경제영토 확장”의 수단인 FTA는 기업 이윤의 균형을 돌우고 더 나아가 군사 안보 동맹을 보증해 주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의 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속살인 것이다. 한미FTA 비준을 저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김어진

논설

2011년에도 계속될 노동자 투쟁 지원과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의 과제

저물어가는 2010년의 끝자락에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영향력 확장 시도가 동아시아에서 낳은 살벌한 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간 상호 포격 사태와 그 후폭풍이다.

이 사태에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과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우파들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 지역까지 포격한다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회창)을 촉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전쟁 촉발 가능성’ 경고도 무시하고 서해 포 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일이 아니”라며 호전적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명박의 서해 포 사격 훈련 강행이 “국내 정치용으로서 날치기 예산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2011년 예산안은 4대강 삼정파 부자 감세를 위한 복지 삭감 예산이었고, 이명박은 이런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주먹을 휘두른 김성희에게 격려 전화까지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는 “12월 8일 본회의장의 몸싸움을 보면서 나는 96년 12월 25일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 그것이 YS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었다”며 우려한다.

사실 이번 날치기는 이명박의 ‘친서민’ 가면과 한나라당의 “70퍼센트 복지 시대를 여는 개혁적 중도 보수” 사기극을 산산조각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 버리면 남은 게 별로 없게 된다’(기재부 장관 윤증현)는 본심을 드러낼수록 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08년 촛불 항쟁과 세계경제 위기의 파장을 거치며 대중 의식의 급진화가 물밑에서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 <내일신문> 설문조사에서도 “북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무려 93.6퍼센트가 동의했다.

몰락의 신호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독재자의 딸’ 박근혜마저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자”며 ‘한국형 선진 복지국가’를 말하는 게 지극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 정국을 조성해서 이런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단속하려는 이명박의 시도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천안함 사고 때도 북풍 몰이로 안보 정국을 조성해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 한 바 있지만, 그것은 지방선거 참패라는 역풍을 낳았다.

2011년에도 이명박의 레임덕 양상은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래로부터 저항이 분출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노동자들은 2008년 촛불항쟁을 통해 정치적 자극과 고무를 받았지만,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 속에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속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올해 현대차 정규직 노조 등의 무파업을 근거로 내년 에 “합리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을 말하지만 이것은 단견일 뿐이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무파업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양보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정규직 ‘강성 노조’는 제대로 건들지도 못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공격해 왔는데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여기에도 파열구를 냈다.

비록 승리하진 못했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투지를 더욱 자극했을 것이다. 최근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맞선 전면파업이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총 조사에서도 기업의 75퍼센트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명박은 물리적 공격과 야비한 이간질뿐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영향력 강화 시도가 낳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이용해서 계속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할 것이다.

게다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보여 주었듯이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투쟁을 고무하기보다 가라앉히는 구실을 하면서 반MB 선거 연합 등에 치중할 수 있다.

이런 걸림돌들을 넘어서 노동자 투쟁이 더한층 발전하려면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과 자신감이 더 커져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서 비정규직 투사들과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정규직 노조 지도부나 야4당 중재단의 통제를 뛰어넘을 정도로 높았다면 브레이크는 잘 막히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높은 분노와 투지는 노조 상층 지도자들이 총파업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논리와 주장들에 분명한 정치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2011년에도 우리는 저항에 나선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과 투지를 높이기 위해 애써야 한다. 제국주의의 영향력 강화 시도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대중운동 건설에도 힘써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는 더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것인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당시 정규직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정규직 노동자 71.9퍼센트(투표자 대비)가 연대 파업에 반대표를 던졌다. 어금니를 깨물며 농성장을 나섰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물론, 승리를 염원한 모든 이들의 심정이 씁쓸했을 소식이다.

물론 이런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현대차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집행부이다. 이경훈 집행부는 급속노조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파업을 실행하길 거부하고 굳이 투표를 강행했다. 더구나 파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거듭 드러내다가 투표 공지 후 하루 만에 가결 선포도 없이 찬반 투표를 강행한 것은 부결을 유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반대표를 던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연대 파업에 찬성해야 했다. 투쟁 때마다 ‘귀족 노동자’니, ‘배부른 자들의 밥그릇 싸움’이니 하는 악의적 공격에 시달린 그들이 아니던가.

반대표를 던진 노동자 일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1998년의 대량해고 기억을 떠올리고는 보수적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측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며 정규직 고용 불안을 확대해 왔다.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나타내는 모순된 의식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까지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큰 힘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연대를 그토록 갈망했다.

더구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번에도 사측의 탄압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한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이런 가능성을 보여 줬다. 찬반 투표에서도 9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그들이 받아들여 온 통념이 서로 충돌하면서 분출하는 투쟁 장면을 반복해

서 보여 줬다.

그래서 2004년엔 금호타이어에서는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파업을 벌여 사내하청 비정규직 2백82명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많은 전진을 이뤄냈다. 철저히 외면받고 고립되곤 했던 과거 투쟁과 달리 이번 투쟁은 대중적이었고, 강력했다.

이런 성과는 ‘비정규직이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정규직이다’ 하는 생각으로 연대 투쟁 건설에 열성을 다한 일부 정규직 투사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재의 의식을 문제 삼아 연대 투쟁 조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 투쟁에서 드러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지와 활력,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연대가 보여 준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노동운동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정종남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목: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한진중공업 노동자 대량해고를 중단하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됐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올해 2월 26일 노조의 전면파업에 굴복해 구조조정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합의를 어기고 4백 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20일부터 나흘간 희망퇴직을 받고 4백 명이 안 되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즉각 전면파업으로 맞섰다. 20일 열린 파업 출정식에는 조합원의 90퍼센트에 이르는 1천여 명이 참가했다. 한 노조 간부는 “유급휴직 중인 조합원들도 대부분 참가했다”며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측에 대한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조선업계의 경기 불황이 시작된 후 한진중공업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2년간 휴업과 부분 파업 등으로 특하면 월급을 30만~40만 원씩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남호 회장은 수백 억씩 주식배당금을 챙겼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이 안 받았습니까?”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측은 영도조선소가 경쟁력이 없어서 수주를 못했다고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해의수주 책임자인 조남호의 아들 상무 조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2년간 단 한 척의 배도 수주하지 못한 조원국은 올해도 2억에 가까운 임금을 받았어요. 파렴치한들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노동자들을 잘라야 한다면서 왜 무능력한 임원들은 해고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발표한 다음 날 주주들에게는 수백 억에 달하는 주식배당을 했어요. 회사가 어려워 노동자들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외주화해서 비정규직으로 공장을 채워겠다는 것이예요.”



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지회가 20일 정리해고 박살, 영도조선소 살리기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있다.

사측의 진정한 의도는 민주노조 파괴에 있는 듯하다. 2003년 김주익 열사 투쟁 때부터 노조에 주도권을 빼앗겨 왔다고 생각하는 사측은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조합원 대부분은 사측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합원들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다. “조합원들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조합원의 30퍼센트를 자르겠다는데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정년이 많이 남지 않은 형님들도 '희망퇴직' 관심 없다. 일년 반 동안 버텼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2003년] 열사투쟁을 경험한 조합원들도 강경하게 싸워서 끝장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선포

했다.

하지만 현재 물량이 많지 않아 파업의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사측의 항복을 받아 내려면 점거파업 등 더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옥쇄투쟁

한 대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조합원의 3분의 1은 휴업 중이고, 3분의 1은 휴업 준비 중이고, 나머지는 마지막 후행작업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밖에 물량이 없어요. [파업이] 조합에 타격을 주지 못해요. 총파업으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더 강경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투쟁 때는 [노조에서] 희망퇴직을 방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희망퇴직 받기 전에 파업에 들어갔어요. 이런

잘한 겁니다. 하지만 물량이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워야 했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고 옥쇄투쟁이든 봉쇄든 강력한 전술도 지도부가 고민해야 합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측은 노조를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조를 밟아야 구조조정도 마음대로 하고 비정규직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잖아요. 사측의 뒤에는 조남호 회장과 동문인 이명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명박의 뺨을 믿고 사측이 막 나가는 겁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연대가 시급합니다. 집중지원해서 싸워야 투쟁의 파급력이 커질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노조가 파업을 벌이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가동한다면

파업의 힘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돼 있지 않다.

그동안 1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지만, 정규직 노조가 이들을 방어하는 데서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지난해 파업 이후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전·교육을 강화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 통과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홍보전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측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질해 어부지리를 얻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명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표적 탄압 중단하라!

2010년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이 기승을 부린 해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심했고 입·출국 통제와 체류 관리가 매우 강화됐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민 공격에 항의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지난 7월에 이주노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포된 미등록 체류자 집단단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집단단속 과정에서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여러 항의 행동이 뒤따랐다.

일련의 항의 운동에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늘 선두에서 싸웠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셸 위원장을 표적 탄압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이주노조 활동을 억누르려고 위원장 등 간부들을 표적 탄압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간부를 맡았던 아노아르, 까지만, 라쑤, 마숨, 토르너, 소부르 동지가 모두 구속되거나 추방됐다.

최근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일하던 사업장에 여러 차례 부당한 압력을 넣었고 결국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시켜 버렸다.

법무부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셸



이주노조는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 왔다.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했고 외국인에게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것은 정당한 활동을 공격하려는 빌미일 뿐이다.

미셸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합법으로 공격할 수 없자 정부는 억지 혐의를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조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 등에 맞서 투쟁한 것을 ‘반한 활동’이라 규정해 탄압해 왔다. 또 이주노

조 활동가들이 반신자유주의 운동이나 반전 운동 등에 참가해 온 것 역시 ‘반한 활동’이라 공격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들이다. 이것이 ‘반한 활동’이라면 한국 정부 자신이 노동자·민중의 반대편에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운동 진영은 미셸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맞서 항의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

12월 19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에서도 여러 연사들이 정부를 규탄했고 함께 싸워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미셸 위원장의 소환 조사에 맞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셸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노동자 운동에도 연대해 왔고, 철거민·동성애자·장애인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 굳건한 연대로 미셸 위원장을 방어하자.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 호) 5만 원 | 2년(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리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